

사회연대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유한나 *hnyoo@hs.ac.kr*

한신대학교 조교수 / 경영미디어대학 경영학·일반대학원 사회적경영(협)·사회혁신경영대학원 사회적경제 주임교수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전문위원(사회연대경제TF),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포럼 위원

발표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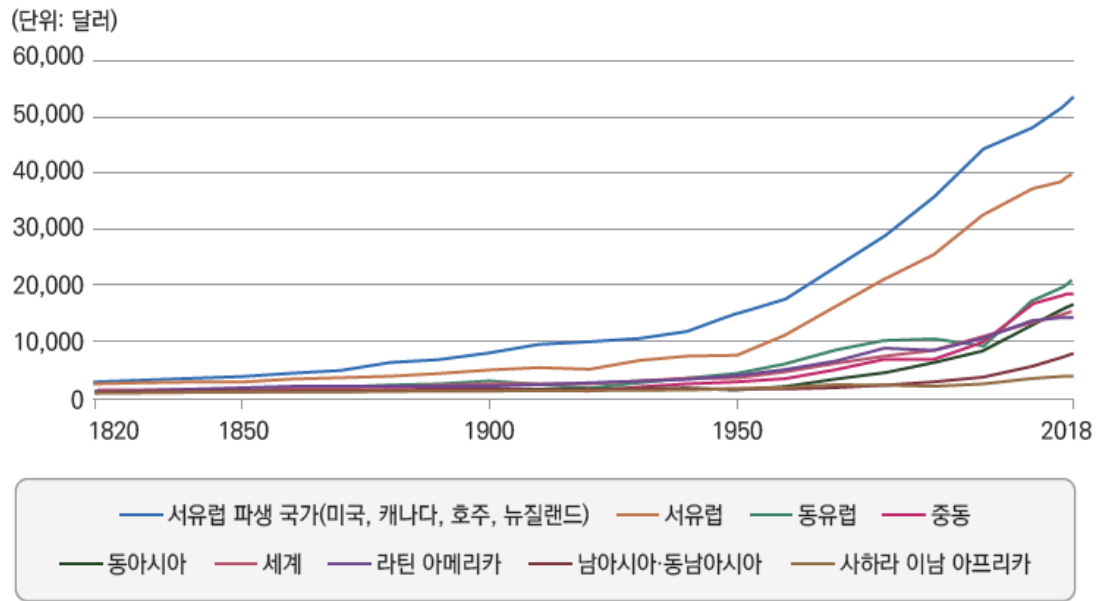
- I . 왜 지금 **사회연대경제**인가: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방식
- II .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특징** 이해하기
- III . 최근 사회연대경제의 **확대**와 **국제적 흐름**
- IV . **국가 전략** 속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와 **정책** 연계
- V . 지역단위 사회연대경제 **대응 전략**

I . 왜 지금 사회연대경제인가

: 지속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방식

자본주의의 성취와 동시에 만들어진 구조적 문제

〈1인당 국내 총생산(GDP)의 변화(1820~2018년)〉



출처: 메디슨 프로젝트

〈지난 30년 간 지니계수(소득 불평등의 지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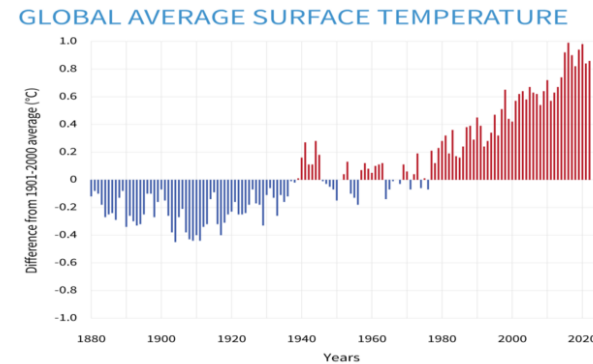
© 세계일보

〈코로나19 이후, 더 깊어진 부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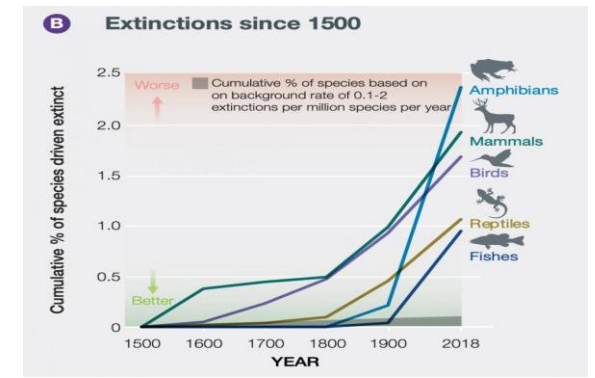
© NEWSIS, 크레디트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를 바탕으로 옥스팜이 작성한 자료

〈지구 평균 온도 상승 추이(1880~)〉



© NOAA

〈전 세계 생물종의 멸종 추이(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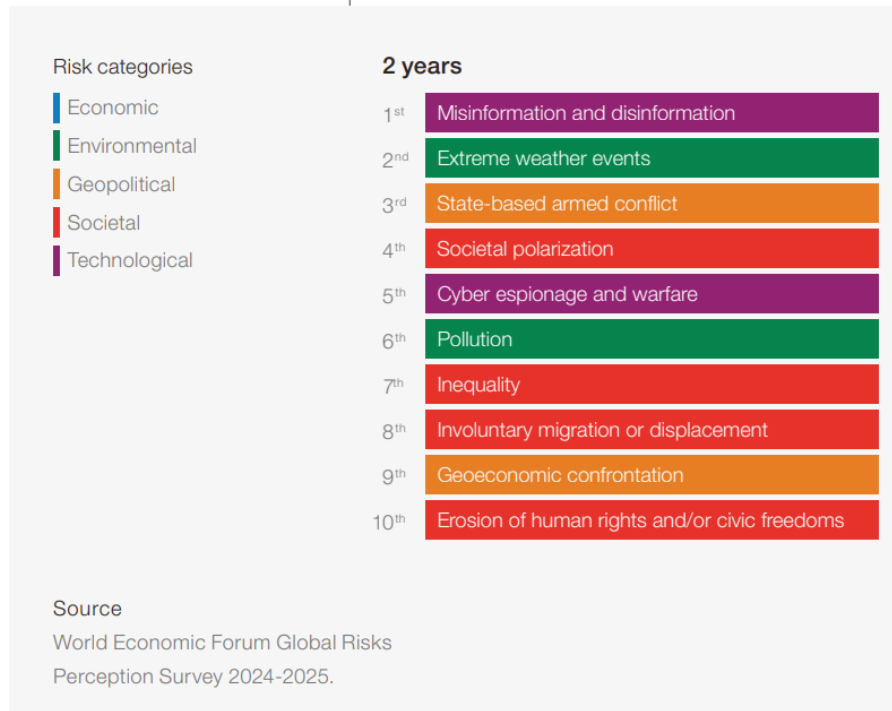


© IPBES(2019), Global Assessment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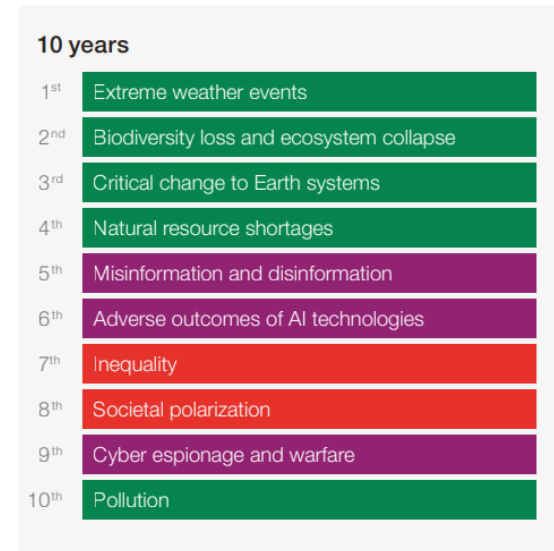
향후 2년과 10년에 직면한 글로벌 위험



The Global Risks Report 2025 (W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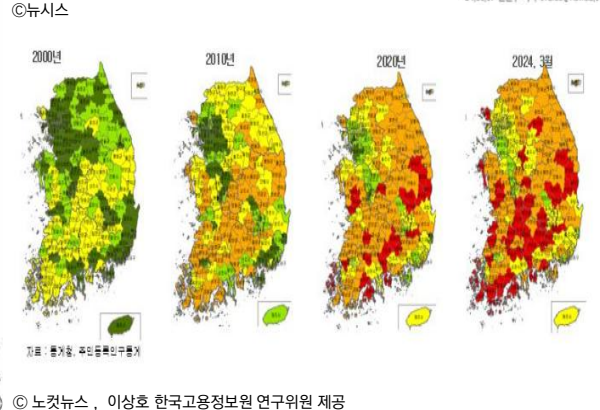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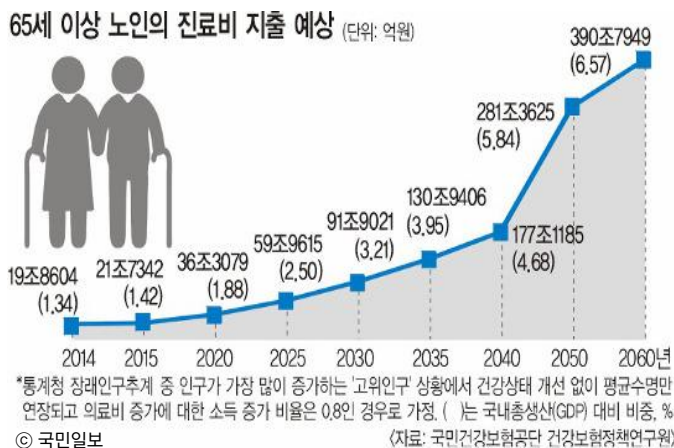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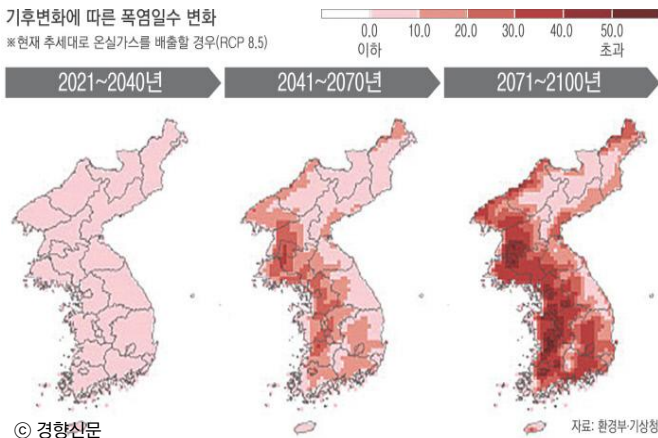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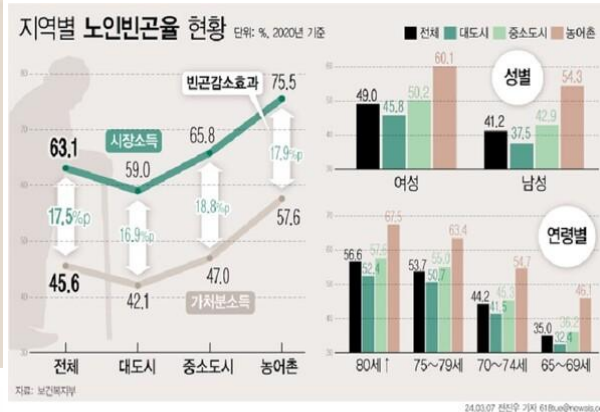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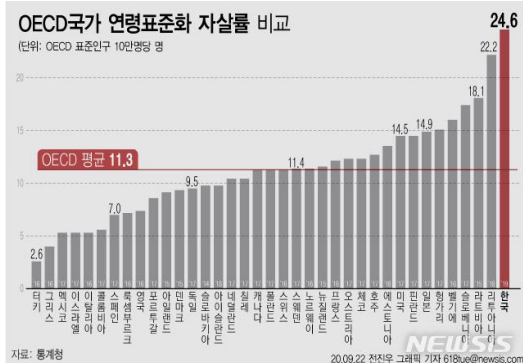
허위정보 및 오정보
극단적 기상현상
국가 간 무력 충돌
사회적 양극화
사이버 첩보 및 전쟁
오염
불평등
비자발적 이주
지정학적 경제 대립
인권 및 시민 자유의 침식



극단적 기상현상
생물다양성 손실 및 생태계 붕괴
지구 시스템의 중대한 변화
자원 부족
허위정보 및 오정보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사이버 첩보 및 전쟁
오염

출처: World Economic Forum *Global Risks Report*

한국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구조적 문제



시장과 정부의 긴장 속에서 진화한 자본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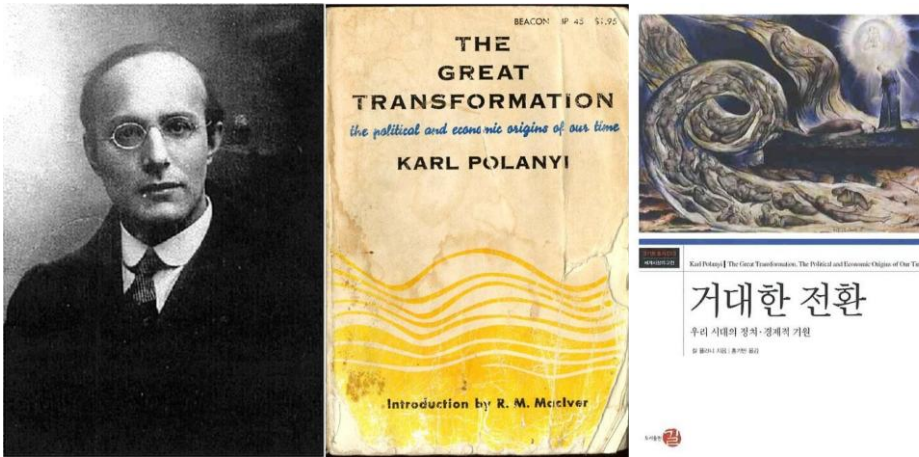
자본주의	대두시기	특징	대표 경제학자 및 어록
자본주의 1.0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18세기 후반 (1776년 국부론, 1920년대 말 미국 대공황)	자유방임적 경제 이데올로기 :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각 주체들이 이윤추구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가 생산성을 극대화한다고 보는 체제	Adam Smith 개인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전체 경제의 복리가 증진된다
자본주의 2.0 (수정자본주의, 케인즈주의)	1931년 영국 금본위제 폐지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시 기 이전 (1936년 케인스 일반이론, 루즈 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영국 과 유럽의 복지국가)	정부가 중요한 경제 주체로 부각 : 독점의 폐해와 빈부격차 등을 국가의 개입 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	John M. Keynes 정부기능의 확대는 현 경제체제의 전면 적인 붕괴를 회피하는 유일한 수단이므 로 지지한다
자본주의 3.0 (신자유주의, 통화주의)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영국 대처와 미국 레 이건의 자유시장혁명)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적 경제정책 :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자유시 장과 자유무역, 규제완화, 국제적 분업 등 을 강조	Friedrich Hayek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을 내버려두 지 않고 간섭하면 시장보다 더 큰 불평 등이 초래된다. 이런 불평등은 정치적 불평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정치적으 로 억누를 것이다.



‘국가 vs 시장’ 이분법에서 풀라니는 그 사이의 ‘사회’를 주목

칼 폴라니 (Karl Polanyi) (1886~1964)

-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사상가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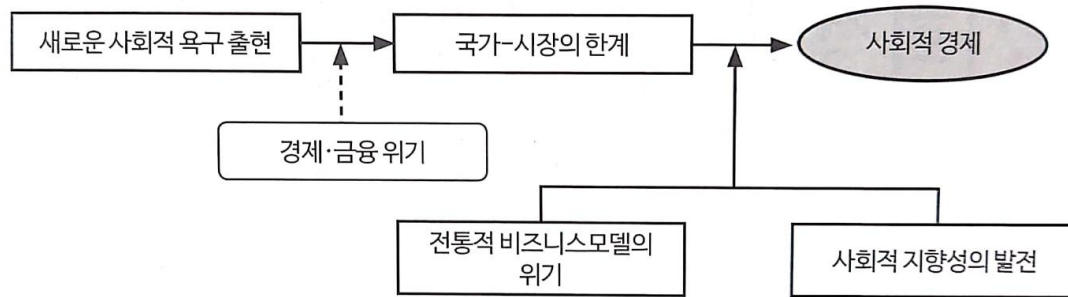
“시장 원리로 사회를 조직하면 사회는 붕괴한다”

- 시장 중심의 경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인간 사회와 경제의 관계에 대한 통찰을 제시
- 시장 경제 이전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상호부조와 공동체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했으나, 시장 경제가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며 인간의 경제 활동을 순전히 경제적 이익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고 비판
- 인간의 경제 활동은 시장 거래 외에도 상호부조, 재분배, 가족 중심의 자급자족과 같이 복잡하고 다원적임 ← **현대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이론적 토대**
- 허구적 상품: 자본주의 사회가 세 가지 중요한 요소인 ‘토지, 노동, 자본’을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취급하면서 사회적 파괴를 초래
- 자본주의적 자기조정 시장(self-regulating market)의 허구성과 폐해를 비판
- 자유시장이 사회를 위협할 때 사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반작용으로서 사회적 자기방어(social protection) 운동이 나타난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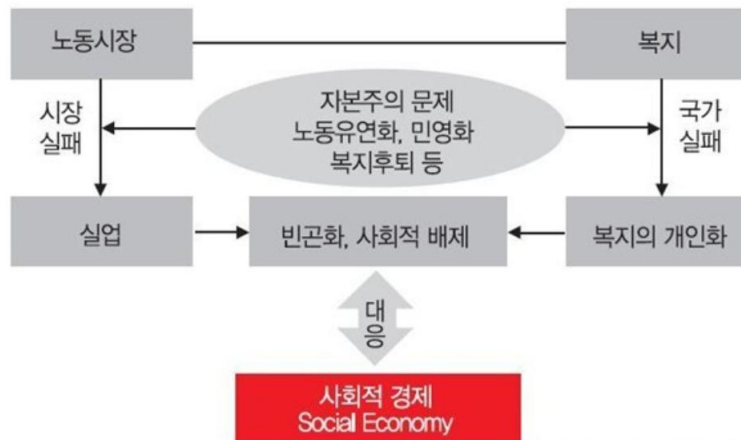
➤ 그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모델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 대안이라고 봄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의 집단적 자기방어(social protection) 메커니즘

〈사회적경제 등장 배경(정관영, 2019)〉



〈사회적경제의 등장(장원봉, 2006)〉



〈인간의 본성과 사회적 경제 (정태인, 2012)〉

구분	시장 경제	사회적 경제 (사회연대경제)	공공 경제
핵심 주체	개인	공동체	국가(정부)
인간의 본성	Homo economicus 이기성	Homo reciprocans 상호성	Homo publicus 공공성
상호 작용의 기제	경쟁	신뢰와 협동	합의
목표	효율성	연대	평등

사람 중심 경제의 역사: 상호부조에서 현대 SSE까지

〈사회연대경제의 역사적 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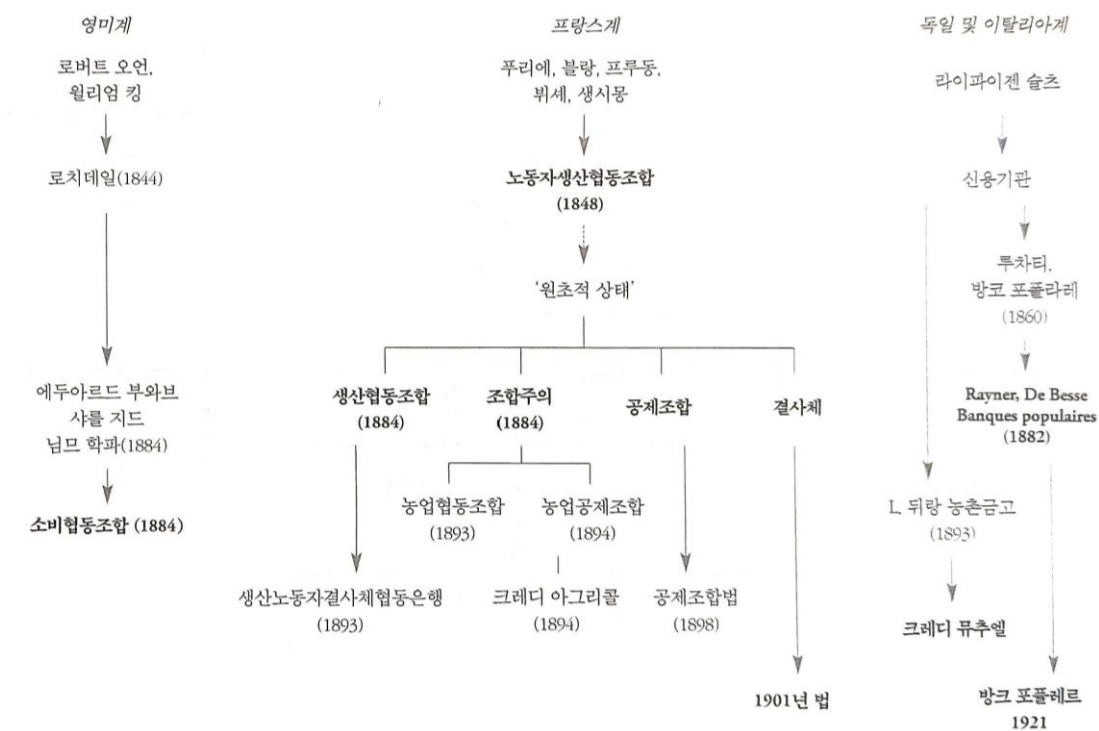
고대와 중세: 상호부조의 전통	• 북미 토착 공동체: 수천 년간 자치·합의·환경 보호 등 SSE적 가치 실천 •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공동 구제 기금, 장인 길드 등 초기 상호보험 형태 • 중세 유럽: 길드, 자선조직, 위험공유 공동체 → 도시 내 자조 네트워크와 상호부조 기초 형성
근대: 제도화된 연대와 협동의 확장	• 19세기 유럽 노동운동: 실업·장애에 대비한 상호조합(Mutual Societies) 확산 → 보험의 주요 공급자로 부상 • 1844년 영국 로치데일 협동조합을 기점으로, 협동조합(Cooperatives) 운동이 유럽, 북미로 확산 • 소비자·생산자·보험 협동조합이 지역 내 생존 기반, 가격 안정, 재해 대응의 중심 역할 ✓ 미국: 협동조합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경제적 자립과 인종차별 극복의 도구로 발전 ✓ 스페인 몬드라곤: 내전 이후 바스크 지역의 경제 재건과 고용 창출 모델로 성장 ✓ 인도: 20세기 초 농업협동조합 시작 → 현재 약 85만 개 협동조합, 2.9억 명의 조합원 보유
현대: 다양한 맥락 속에서의 SSE 통합	• 전 세계적으로 협동조합, 상호조합, 자활조직,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활동 등이 사회적 배제 극복, 지역 회복,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조직들은 각기 다른 역사적·문화적 조건 속에서 발전했지만, “사람 중심, 상호성, 공동체 연대”라는 공통된 가치 위에 서 있음

인간의 존엄을 경제 질서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제 패러다임

〈조직 유형별 형성 배경〉

협동조합 유형	주요 등장 시기 (국가)	핵심 문제의식 (왜 등장했는가)	대표적 내용·의의
농업협동조합	13세기 / 1882년 / 1890년대 프랑스, 덴마크 등	농민의 생존 위기, 시장 경쟁 속 생산·유통 안정 필요	중세 프랑스 치즈 공방 협동 → 덴마크 낙농협동조합(1882) → 현대 농업협동조합의 기초
생산노동자 협동조합	1830~1880년대 프랑스	산업화로 인한 노동자 착취, 자본과 노동의 분리	노동자가 자본·생산을 소유·운영, 노동을 통한 해방과 사회개혁 추구
소비협동조합	1844년 / 19세기 말 영국, 프랑스	노동자의 열악한 생활조건, 불공정 가격·불량 상품 문제	로치데일 협동조합(1844) → 소비자 주권·민주적 운영 원칙 정립
신용협동조합	1864년 / 1893년 독일, 이탈리아	농민·서민의 금융 배제, 담보 없는 빈곤 문제	상호보증 기반 지역금융, 비분할 준비금·배당 제한 등 사회적 금융 원칙 확립
공제조합	1790년대 / 19세기 프랑스	질병·실업·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	상호부조에서 출발해 사회적 보호를 제도화한 공제 시스템으로 발전
결사체	19세기 이후 유럽 전반	시장과 국가로 해결되지 않는 권의 보호·복지 요구·사회문제 대응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권익옹호·자원활동 조직(NGO, 자선단체 등), 일부는 지역 복지 공급자로 기능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형태와 조직의 탄생〉



출처: 티에리 장테(2019),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편혜원 역, 알마

예) 산업화로 인한 부작용에 대응하며 태동한 소비자협동조합

“18세기 영국에서는 면화를 가공해서 옷감을 만드는 직물산업이 발달했다. 대개는 가족 단위로 면화를 직접 재배해서 소규모의 가내공업 형태로 직조하는 자영업자들이었다. 그런데 채 6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 자영업자들이 거의 사라졌다. **대규모 상인들이 시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독점력을 이용해 영세 직조공들의 몫을 빼앗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 **대량생산, 극단적인 분업, 탈숙련화된 노동력을 수반한 공장 시스템의 성장**이 두 번째 이유였다(버첼, 2012: 79). 예전의 도제 시스템은 와해되었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기 위해 **시중임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노동력을 팔았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시작된 자본주의의 발달은 이렇게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몰아갔다.

실업과 소득의 상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급속한 도시화와 심각한 보건위생의 문제**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1844년 세계 최초의 (성공한) 협동조합이라 일컬어지는 로치데일선구자조합**이 설립되었던 지역의 상황도 이와 같았다. 이런저런 정치적 시도들이 실패한 가운데 마침내 **28명의 로치데일선구자들은 1파운드씩을 모아 밀가루와 버터 등을 파는 작은 점포를 개설**했다. 그 당시 밀가루는 노동자들의 주식인 빵을 만드는 원료였음에도 **제분업자와 제빵업자들의 독점으로 가격이 워낙 비싼 데다가 불순물이 섞여 있기 일쑤**였다. **가난한 노동자들은 생활고를 이기기 위한 자구책으로 가장 손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공동구매 조직을 결성**하였다.” -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1844년,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로치데일 직물공장의
노동자 28명은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였다.



이 초라한 점포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Co-operative Group'의
뿌리가 되리라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출처: <https://academy.sehub.net/archives/2699>
https://youtu.be/_3dP4ru1q_4?si=Y-C6omWmonfEnl54

사회적경제의 부침과 재구성

- 19세기 유럽에서 **협동조합·공제조합 운동**으로 등장
- 20세기 유럽이 사회보장제도 수립으로 국가 역할 확대하며 협동조합 기능이 **복지국가로 편입, 흡수 (사회적경제 역할 ↓)**
- 1970년대 : 1차 오일쇼크와 경기침체로 유럽국가들이 사회보장재정을 축소하고 다양한 복지급여를 민간으로 위탁
 - **사회적기업** 등장.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공공부문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사회적경제 역할 ↑**)

□ 1970년 이후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발전 요인(유럽위원회, 2000)

- 생활·가치 변화: 노동시간 단축과 여가 증가로 시민사회 활동 확대, 개인 맞춤·클라이언트 중심 서비스 선호 강화
 - 경제 구조 변화: 서비스 경제로 전환되며 돌봄·상담·간호 등 휴먼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역할 확대
 - 공공서비스 재편: 정부가 제공하던 사회서비스가 사회적경제로 이전되는 사회적 민영화 확산
 - 사회운동의 확산: 반전·환경·양성평등·공정무역 등 신사회운동과 포스트모던 가치가 새로운 영역 창출
 - 고용 위기 대응: 1970~80년대 대량실업 속에서 고용 창출·직업훈련·고용지원 역할 강화
 - 정치·인구 변화: 민주화 과정과 고령화·실업 증가 등 사회·인구구조 변화가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를 부각
- 1990년대 중반 이후 : 제도화된 사회적경제(국가정책의 대리자로 인식, 시장위기에 타격을 입어 쇠신 필요)를 비판하며 등장한 **연대경제**(비공식경제, 민중경제) 실천이 각 대륙에서 확산되며 21세기 세계시민사회의 공통된 대안적 경제 비전으로 수렴

제도화된 사회적경제에 대한 성찰로 연대경제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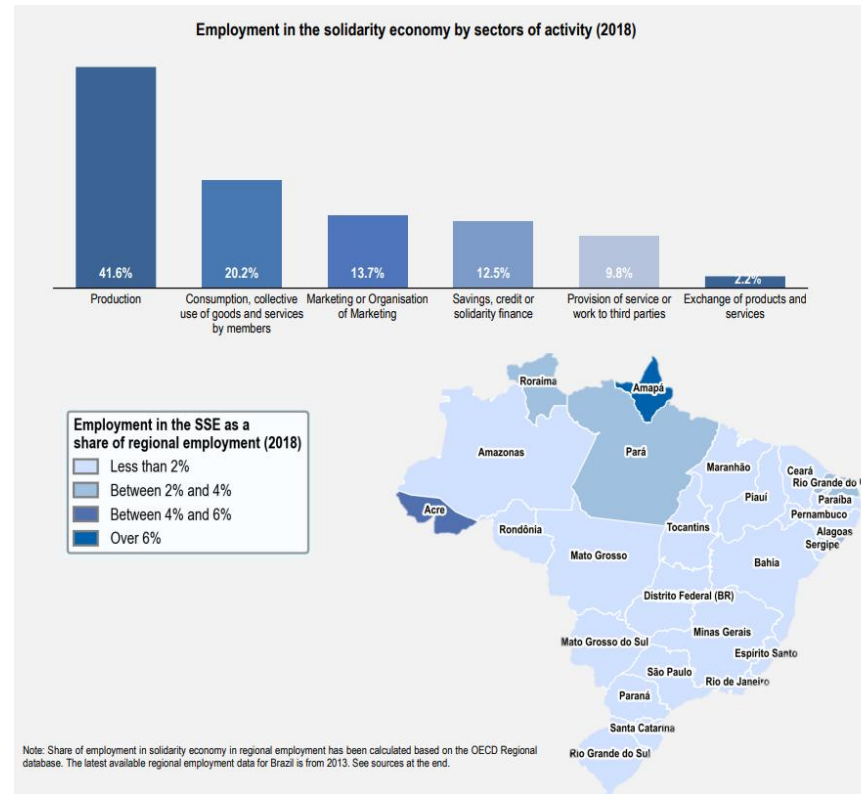
연대경제

Solidarity Economy

사회적 연대와 포용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지역과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양

- 남미(특히 브라질): 민중경제, 자율적 경제활동, 생계 기반의 비공식 경제를 포함
 - 캐나다(퀘벡):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 커뮤니티 경제개발과 연계
 - 유럽: 아동·노인 돌봄과 같은 근접 서비스 중심의 연대 기반 활동
- 사회적경제는 제도화된 조직 중심,
➤ 연대경제는 풀뿌리 기반의 신생 조직이나 실험적 실천 중심

[참고] 브라질 연대경제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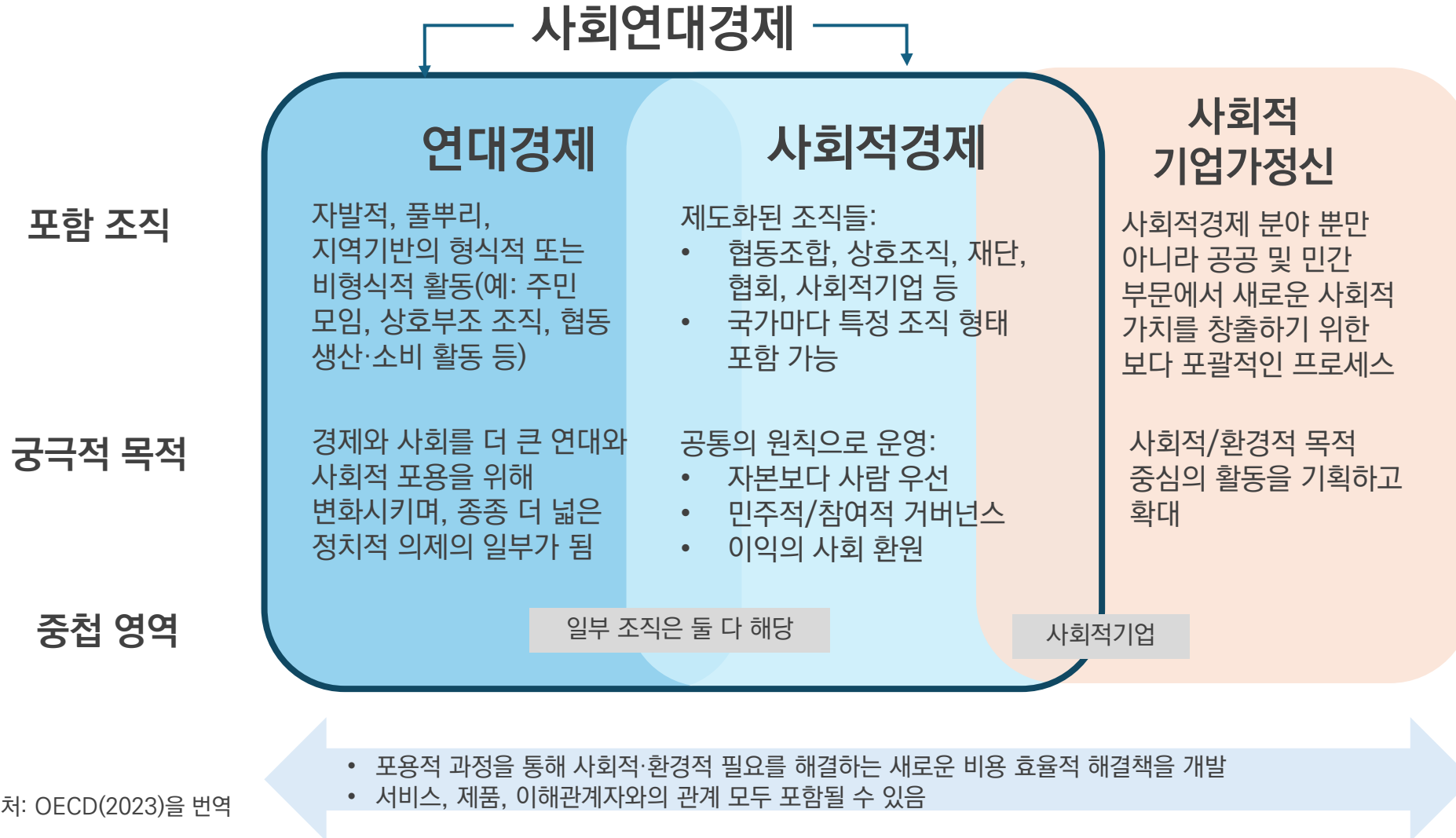


등장 배경:

-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한계,
공공성 약화, 공동체
기반 회복 필요성
- 자율적·비제도적 경제
실험의 대두 (특히
남반구, 유럽 일부,
아프리카 등)

II. 사회연대경제의 개념과 특징 이해하기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경제와 연대경제를 포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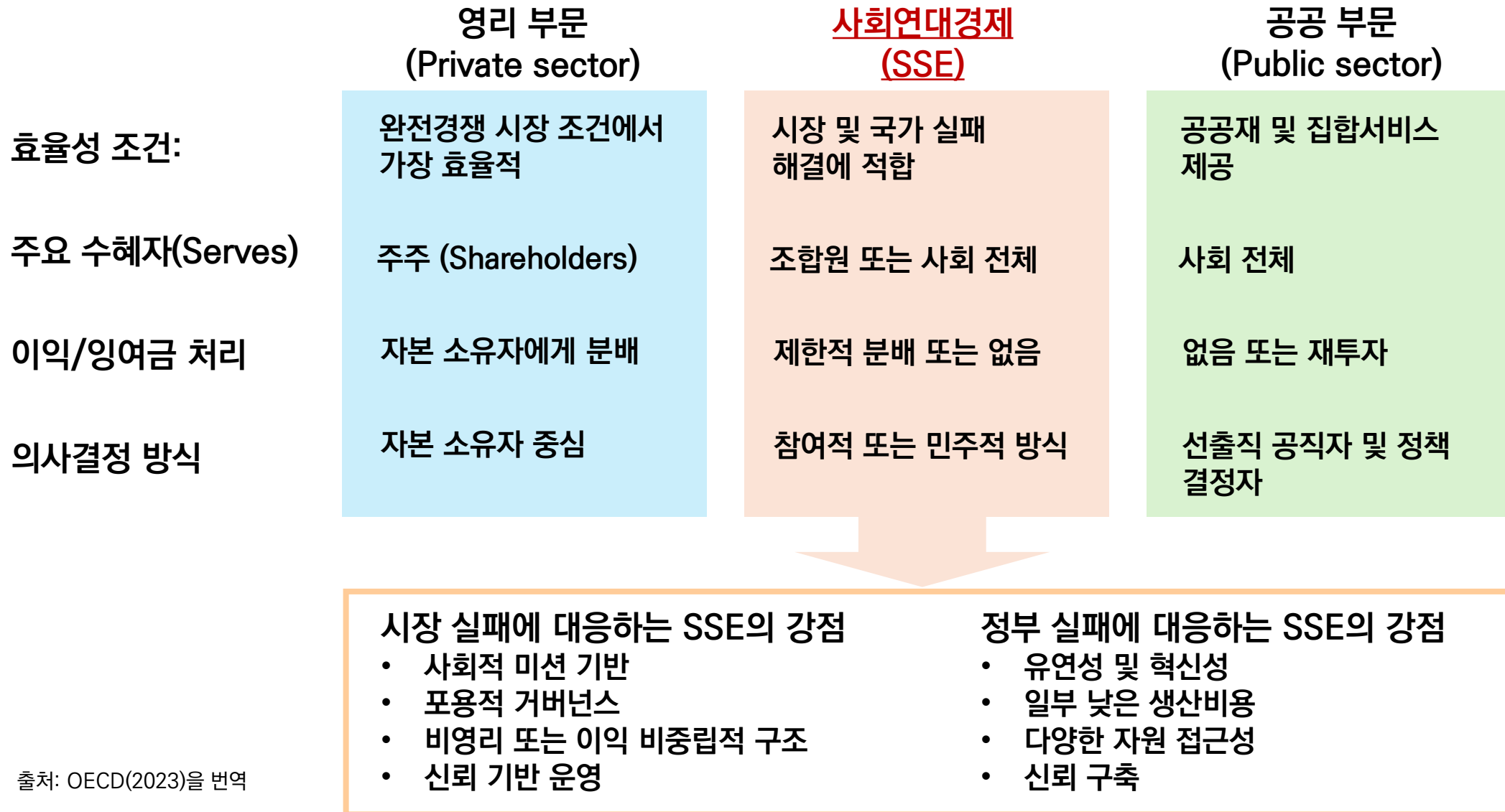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국제기구의 정의

- ILO(2022) “사회연대경제(SSE)는 집단 이익 및/또는 공익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조직 및 기타 주체를 포괄한다. 이들은 자발적 협력과 상호부조, 민주적 및/또는 참여적 거버넌스, 자율성과 독립성, 잉여 및/또는 이익과 자산의 분배와 활용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하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SSE 조직은 장기적인 생존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며, 비공식 경제에서 공식 경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활동한다. 이들은 사람과 지구를 돌보는 것, 평등과 공정, 상호의존, 자율적 운영,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와 생계수단 확보와 같은 가치들을 내재화하고 실천한다. 국가별 상황에 따라 SSE에는 협동조합, 협회, 상호부조조직, 재단, 사회적기업, 자조모임, 기타 SSE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주체들이 포함된다.”
- OECD(2022) “SSE는 협회(associations),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조직(mutual organisations), 재단(foundations), 그리고 보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과 같은 조직들로 구성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영리조직 뿐 아니라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 조직, 풀뿌리 운동, 자발적 모임과 같은 활동도 사회적 경제의 일부로 포함된다. 이러한 조직들의 활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목적(societal objectives), 연대(solidarity)의 가치, 자본보다 사람을 우선시하는 원칙(primacy of people over capital),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democratic and participative governance)에 의해 추진된다.”
- EU(2021)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적·환경적 목적을 우선시하며, 구성원·이용자(‘집단적 이익’) 또는 더 넓은 사회(‘공익’)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대부분의 이익과 잉여금을 재투자하고, 민주적·참여적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경제이다.”

사회연대경제의 공통 원칙(ILO,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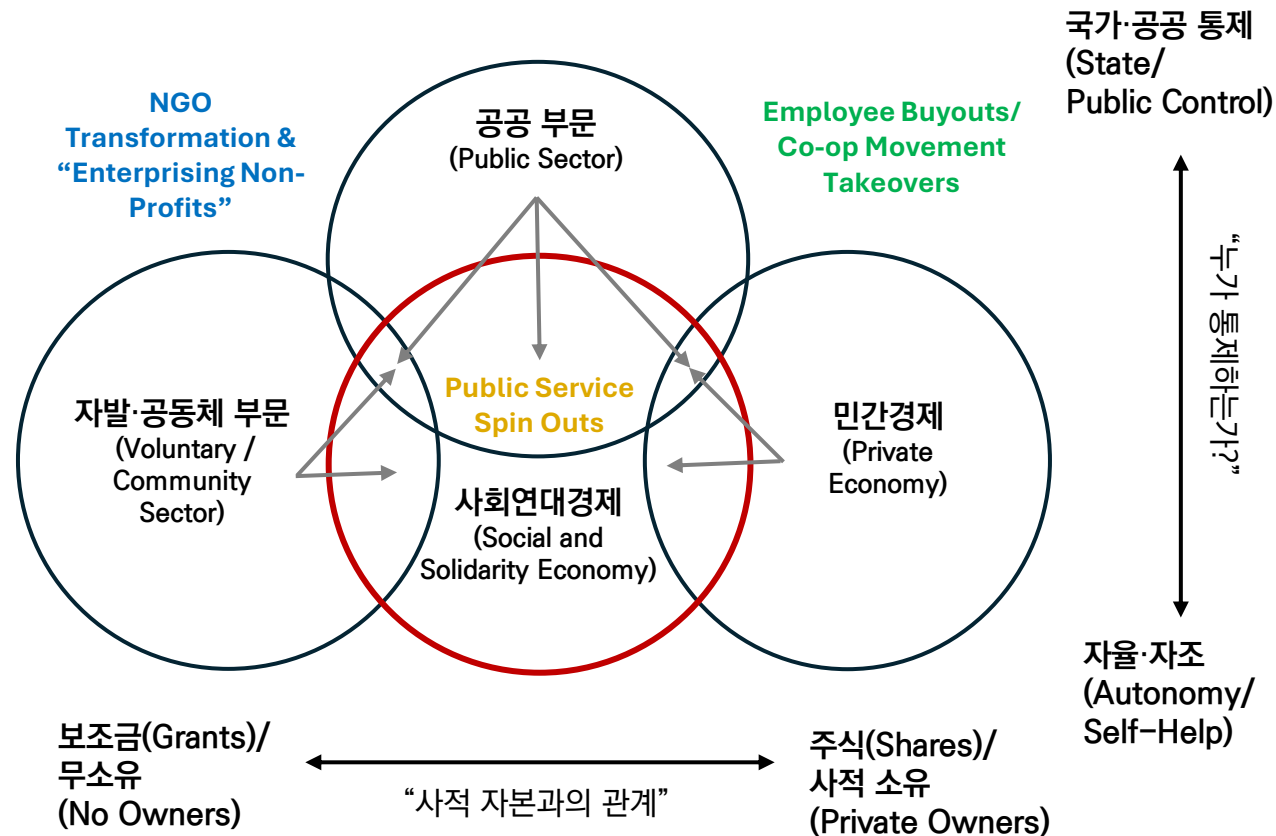
- 1. 사회적 또는 공적 목적**(Social or public purpose) : 이윤보다 사람과 사회적 목적을 우선시한다.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그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 일하거나 살고 있는 공동체, 또는 사회의 수요를 충족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 2. 이윤분배의 금지 또는 제한**(Prohibition or limitation of profit distribution) :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우선시한다. 성과물(이윤 또는 잉여)을 창출하는 SSE는 성과물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SSE의 매각, 전환 또는 해산 시, 잔여 수입(earnings)이나 자산(assets)은 SSE와 유사한 제약을 지닌 단위로 이전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거버넌스**(Democratic and participatory governance) : SSE에 적용되는 규칙은 민주적·참여적·투명한 거버넌스 원칙을 명시하며, 정책 입안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며, 선출된 대표에게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구성원에 의한 통제(control)를 가능하게 한다. SSE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투표권, 즉 '1인 1표'의 원칙을 가진다.
- 4. 자발적 협력**(Voluntary cooperation) : SSE에 대한 참여는 강제나 강요가 아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다. 구성원과 이용자는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지 않으며, 전적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SSE 단위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남는다.
- 5. 자율성과 독립성**(Autonomy and independence) : SSE는 자치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으로, 각 SSE 단위는 정부 당국이나 SSE 외부의 기타 주체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부당한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의 규칙과 결정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시장과 정부 사이의 간극을 잇는 관계·존엄·참여의 경제



출처: OECD(2023)을 번역

SSE는 공공-민간-시민의 협력적 작동을 확장하는 경제



❖ 각 섹터가 SSE로 이동·전환되는 방식

① 공공 → SSE :

Public Service Spin Outs

- 공공서비스가 분리·독립되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형태로 전환
- 예: 공공돌봄 서비스의 사회적협동조합화

② 시민사회 → SSE :

NGO Transformation & “Enterprising Non-Profits”

- 비영리·시민단체가 수익사업을 결합한 사회연대경제조직으로 전환
- 예: NGO가 돌봄·교육·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③ 민간 → SSE :

Employee Buyouts / Co-op Movement Takeovers

- 노동자 인수, 협동조합화
- 이윤 중심 기업 → 참여·연대 기반 조직
- 예: 노동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세로축: SSE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중간적·혼합적 통제 구조

가로축: SSE는 자본을 쓰되, 지배당하지 않는 구조를 지향

Based on Westall, A. (2001) Value-led, Market-Driven: social enterprise solutions to public policy, London: IPPR

사회연대경제조직은 국제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활동 영역〉

Figure 3.3. SSE entities are active throughout the economy



Source: Adapted from (OECD, 2020^[4]).

© OECD(2023)

Health and social services(보건 및 사회서비스)

Trade and retail(소매·유통)

Culture and media(문화 및 미디어)

Construction(건설)

Tourism(관광)

Education(교육)

Energy(에너지)

Manufacturing(제조업)

Banks and social finance(은행과 사회적 금융)

Food industry(식품산업)

ICT services(정보통신)

Recycling(재활용)

Mobility(모빌리티/교통)

Real estate(부동산/주거)

And many more(그 외 다수) ...

사회연대경제의 조직 유형(ILO, 2022; OECD,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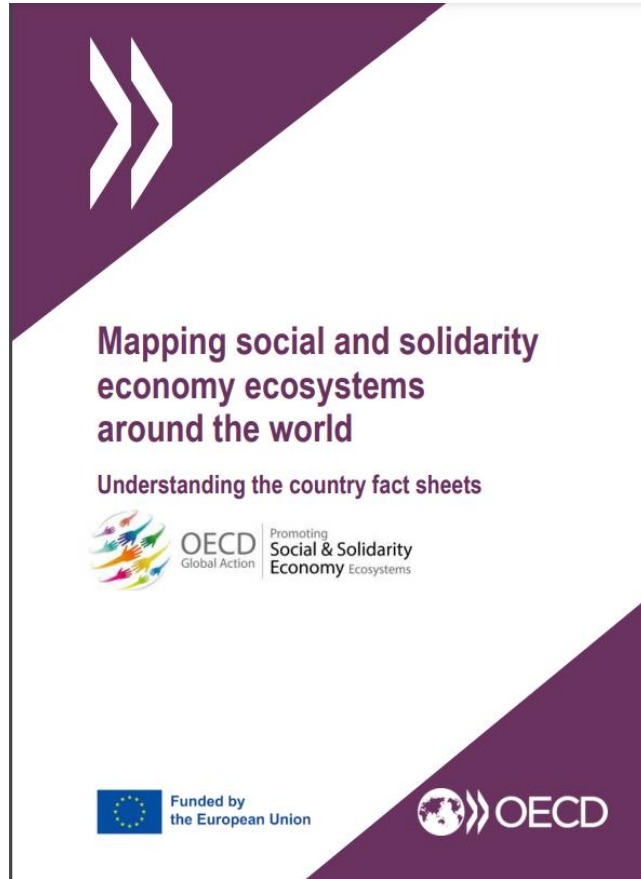
1. **민간단체**(Associations) 또는 **자발적 조직**(voluntary organisations) : 원칙적으로 가게 또는 공동체를 위한 비상업적 서비스(non-market service)의 생산에 종사하는 법인이며 자발적 기여를 주된 자원으로 함. 공동체기반 또는 풀뿌리단체는 그 구성원을 기반으로 하며 지역사회 혹은 마을공동체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들을 위해 봉사
2. **협동조합**(Cooperatives) :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기업을 통하여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
3. **공제조합**(Mutual societies) : 집단활동을 통하여 각자의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인들에 의하여 조직됨. 정기적으로 공동기금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인적 또는 물적 리스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구별
4. **재단**(Foundations) :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기부 받은 것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활용하여 다른 조직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법인
5.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s) : 시장 수단을 활용하지만, 사회적 약자(장애인 및 장기 실업자)의 고용과 교육훈련,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 제품의 생산 또는 여타의 방식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원과 같이 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단위

[참고]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조직 유형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 25.3.2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연대경제기업”이란 재화 및 서비스 등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하면서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61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 및 제161조의10(농협금융지주회사)에 따른 사업조직은 제외한다.
 -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만, 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2호다목(중앙회출자회사) 및 제141조의9제1항제5호(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는 제외한다.
 - 아.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 공동사업법인**
 - 자.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 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 카.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타.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 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 하. 그 밖에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7.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조직 간 활동 교류 및 사업 협력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협의체 또는 연합체 등을 말한다.
8.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 가. 제2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기업, 나. 제3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중간지원조직, 다. 제7호에 따른 사회연대경제 연합조직, 라. 제17조에 따른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 마. 그 밖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참고]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통계는 국제 기준에 비해 범위가 좁고 구조적으로 불완전



Country	Associations	Cooperatives	Mutual organisations	Foundations	Social enterprises
Austria	■	■	■	■	
Belgium	■	■	■	■	■
Brazil	■	■			
Bulgaria		■		■	■
Canada	No break-down available in the CFS.				
Croatia	■	■		■	■
Cyprus	■	■		■	
Czechia	■	■			■
Denmark	■	■	■	■	■
Estonia					■
Finland	■	■		■	
France	■	■	■	■	
Germany	■	■	■	■	■
Greece	No break-down available in the CFS.				

Country	Associations	Cooperatives	Mutual organisations	Foundations	Social enterprises
Hungary	■			■	
India		■			■
Ireland	■	■			■
Italy	■	■		■	■
Korea		■			■
Latvia	■			■	■
Lithuania	■			■	
Luxembourg	■	■	■	■	
Malta	■			■	
Mexico		■	■		■
Netherlands	■	■	■	■	■
Poland	■	■		■	■
Portugal	■	■	■	■	
Romania	■	■	■	■	■
Slovak Republic	■	■			■
Slovenia	■	■		■	■
Spain		■		■	
Sweden	■	■		■	
United Kingdom			■		
United States		■		■	

▲ 민간 조직(협회)/협동조합/상호공제조직/재단/사회적기업의 국가별 데이터 제공 내역. 우리나라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만을 다루고 있다. ©OECD 보고서 발췌

Ⅲ. 최근 사회연대경제의 확대와 국제적 흐름

회복력 있고 포용력 있는 경제발전 모델이라는 국제적 인정

- 팬데믹 이후,
국제사회는 기존의 시장 중심, 국가 중심 시스템만으로는 이 복합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
- 이에 따라 사회연대경제는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대안으로 떠올랐음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COOP
SSE



International Year
of Cooperatives

Cooperatives Build
a Better World



UN

Inter-Agency Task Force on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Europe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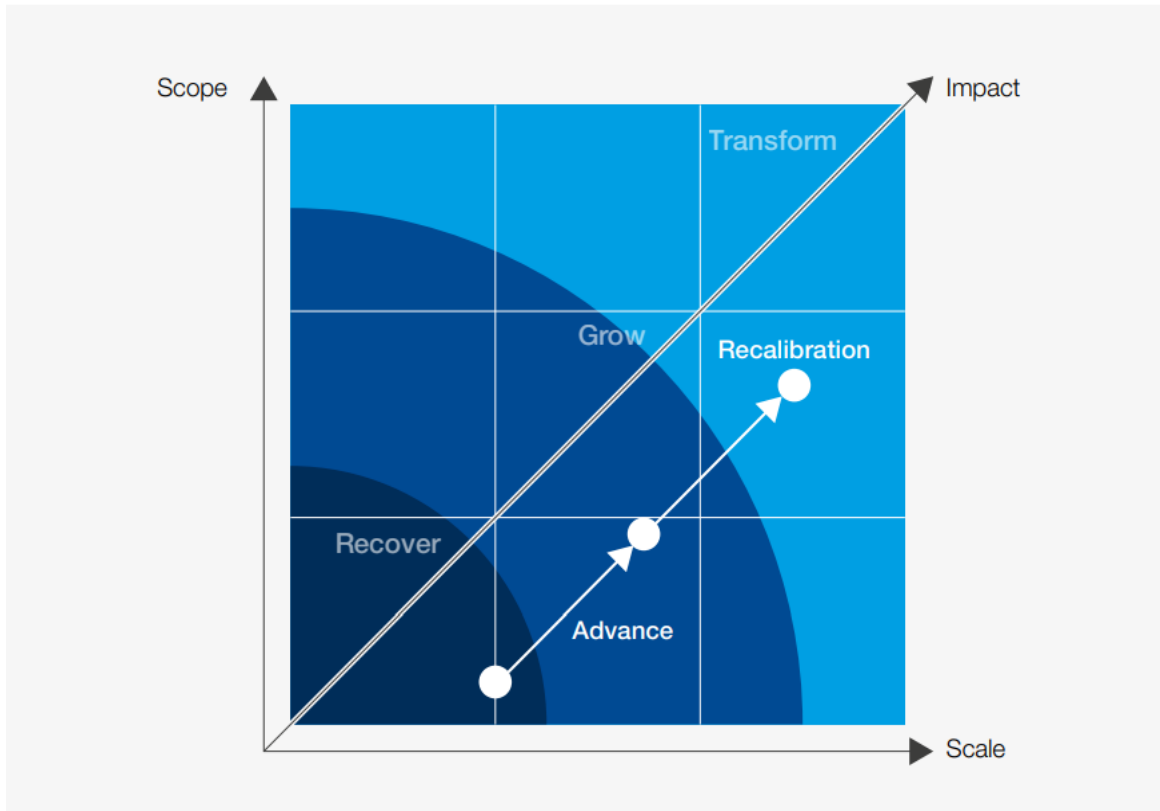


OECD
Global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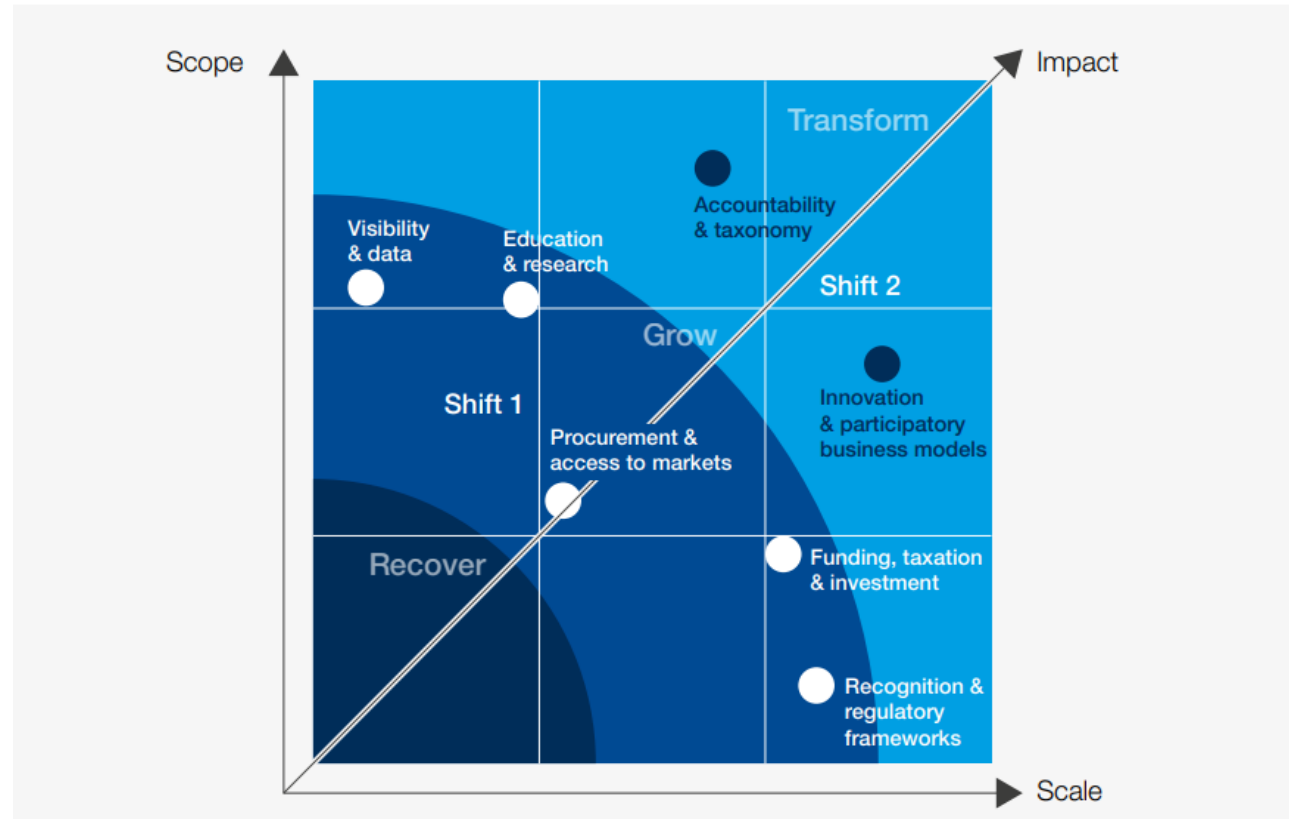
Promoting
**Social & Solidarity
Economy Ecosystems**

세계경제포럼(WEF)(2022)은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위해 사회연대경제에 주목

Maximizing the social economy's scale, scope and impact



Policy priorities enabling the two shifts to mainstream the social economy



World Economic Forum(2022), Unlocking the Social Economy Towards an inclusive and resilient society, 2022.5.23

ILO는 SSE를 통해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만들 수 있다고 선언했고,



- 1919년 창설 이후부터 협동조합에 지원. ILO 협동조합 권고안 제193호 (2002)에서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협동조합”을 명시
- 2022년 6월 – ILO(국제노동기구)의 ‘**괜찮은 일자리와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concerning decent work and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을 합의 – UN 역사상 처음으로 전문기구인 ILO에서 사회연대경제에 관한 토론을 진행.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그 역할을 인정하는 것
- 2023년 – ‘OECD-ILO 고위급 회의’에서 SSE가 경제 회복과 사회정의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적 기반임을 강조. 법적 인정과 정책 통합 필요성 제기
- 2025년 6월 12일 – ILO가 주도하는 글로벌 연대정의연합(Global Coalition for Social Justice)은 제113차 국제노동총회(ILC)와 연계하여 ‘인권 기반 경제(Human Rights Economy, HRE)’를 주제로 포럼 개최 – 사회연대경제(SSE)가 인권 기반 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강조

“불평등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이
필수적입니다.”

- 룩셈부르크 노동부 장관 조르주
미쇼(Georges Mischo)

“연대경제는 지구, 인간,
평화문화에 대한 존중과
연대를 증진합니다.”

- 브라질 외교부 사회문제국장
아드리아나 마르틴스(Adriana
Martins)

(마무리 발언에서 SSE가 HRE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SSE는 단일 이슈가
아니라 횡단적이고 통합적인 문제입니다.
ILO, 특히 COOP/SSE Unit*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합니다.”

- 토니 무어(Toni Moore), 바베이도스노동조합 사무총장 및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대표

*ILO 내 협동조합 및 사회연대경제 담당 부서

UN은 SSE를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의 주요 수단으로 지지하며,



- 다양한 유엔 기구(UNDP, UNRISD 등)가 1990년대부터 지역개발과 NGO 중심으로 논의 시작
 - 2013년 UN 사회연대경제 증진을 위한 태스크포스(Inter-agency Task Force on SSE)를 신설하고, 지식 확산 플랫폼을 운영 (<https://unsse.org>)
 - 2023년 4월 18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총회(The General Assembly, 77th Session 66th Meeting)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결의안 채택
- 2027년에는 OECD 장관급 보고서에서 이행 정도를 발표할 계획

출처: 라이프인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15505>

UN 결의안 전문 <https://undocs.org/Home/Mobile?FinalSymbol=A%2F77%2FL.60&Language=E&DeviceType=Desktop&LangRequested=False>

UN 결의안 채택 장면 https://youtu.be/3EkkMDcTJRE?si=LF-lmzLaK_VLzgaW



© UNSSE, Hybrid Presentation of the UN Secretary General Report on the SSE

EU는 정책·제도 차원에서 SSE 생태계를 구축하라는 권고를 하였고,



- 1989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졌고, 2000년대 후반부터 SSE 논의 강화
- 2021년 12월, 유럽위원회는 사회적경제 실행 계획(Social Economy Action Plan)을 발표해 SSE 조직의 법적·정책적 환경을 강화하는 로드맵을 제시
- 2023년 11월, 유럽이사회는 **회원국이 사회연대경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도록 권고하는 공식 문서**(Promoting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채택
- 또한 지역기반 네트워크와 협력 생태계를 성장시켜 나가고 있음
 - ✓ European Social Economy Regions(ESER)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지방 차원의 SSE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구축
 - ✓ RIPESS Europe 등은 유럽 전역의 사회연대경제 단체와 정책 주체를 연결하여 정책적 연대를 강화하고 있기도 함
- 더 나아가 공공조달, 금융·역량지원 등 실질적 정책 수단 실행
 - ✓ 유럽 단일시장 프로그램 내에서 사회적 조달(Social Procurement), 사회혁신 경쟁, 기업가 교육, 사회적경제 미션 등 다양한 지원정책 실행
 - ✓ 지자체와 국가 단위의 SSE 전략 수립과 정책 적용을 통해 정책 프레임과 실행 인센티브를 조성함

European Commission. (2021, December 9). Building an economy that works for people: An action plan for the social economy.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537&langId=en>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3, November 27). Council recommendation on developing social economy framework conditions (C/2023/1344).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 1344. https://docs.un.org/en/A/79/351?utm_source=chatgpt.com

European Commission. (n.d.). Social economy gateway. <https://social-economy-gateway.ec.europa.eu>

OECD는 2022년, 회원국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하라는 권고 가이드라인을 제시



- 1990년대 후반부터 ‘사회적기업’, ‘사회혁신’ 중심 논의 시작
- 2022년 『**사회적연대경제 및 사회혁신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채택 : OECD 각료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최초의 SSE 국제 권고안. SSE 활성화를 위한 12가지 정책 권고 항목을 제시했으며 OECD 법적 수단 (Legal Instrument)으로 등록되어 회원국의 정책 도입 가이드라인 역할 수행
- 2023년 회원국 장관급 및 국제기구가 참여한 SSE 정책회의인 ‘OECD 고위급 회담’(프랑스 파리)에서 “SSE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의 핵심 자산”이라는 공동 인식을 공유. 기후 위기, 돌봄 위기,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경제 주체로 SSE 강조
- 또한, UNTFSSSE, ILO, EU, GECES(유럽 사회적경제 전문가 그룹) 등과 협력하여 SSE의 글로벌 정착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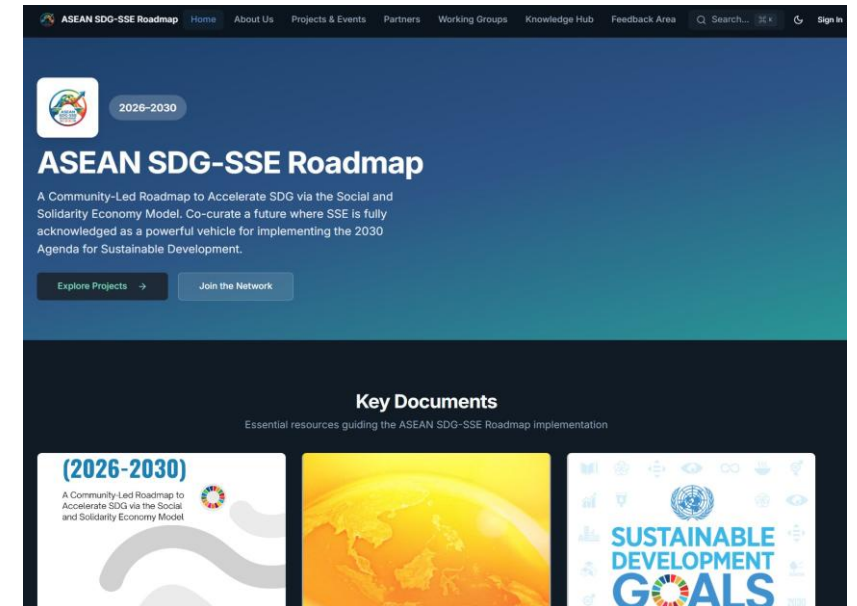


OECD. (202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67>

ASEAN은 2026년 1월 SDG-SSE Roadmap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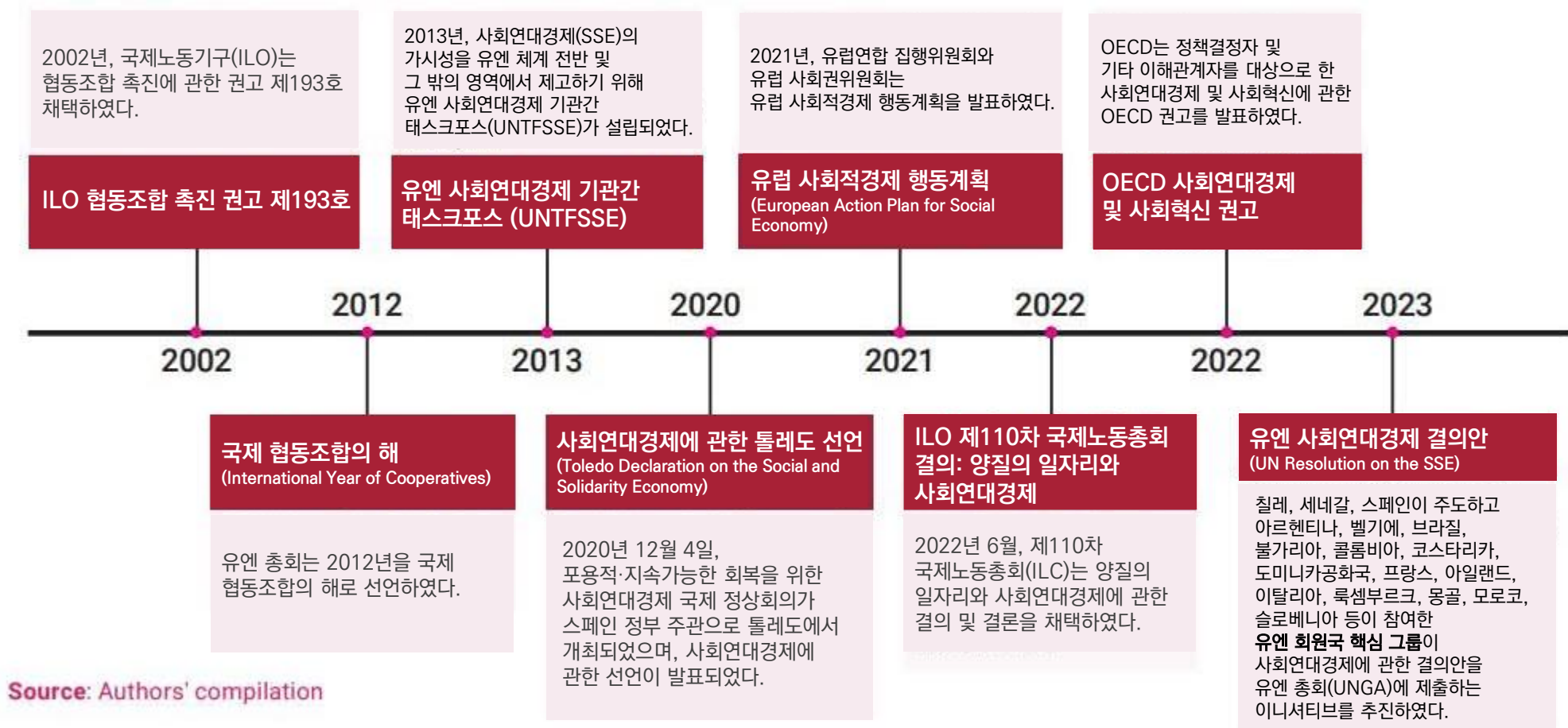
- 사회연대경제의 지역 생태계 정책 접근

- 2026년 1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인 ASEAN*이 'ASEAN SDG-SSE Roadmap(2026-2030)'을 발표
 - *ASEAN 회원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이 로드맵은 향후 5년 동안 사회연대경제를 SDGs 실행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 프레임워크
 - 사회연대경제를 개별 조직이나 국가 정책 차원을 넘어 '지역 생태계 정책(regional ecosystem policy)'으로 접근
 - 로드맵의 주요 방향
 - 사회연대경제 정책과 법제도 정비
 - 사회적금융 및 시장 접근 확대
 - SSE 데이터와 연구 네트워크 구축
 - 역량 강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ASEAN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즉, SSE를 SDGs 달성을 위한 지역 개발 전략의 한 축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음



글로벌 차원의 사회연대경제(SSE) 주요 이정표

❖ SSE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지역적 프로세스 및 합의



사회연대경제는 중요한 대안 경제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전 세계 사회적경제 현황

- 사회적 경제는 **전 세계 GDP의 약 7%**를 차지
- ✓ 유럽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오늘날까지도 활발히 작동. 약 280만 개의 조직, 1,360만 명 고용, GDP의 10%, 전체 고용의 약 6.5%를 차지
- ✓ 캐나다 퀘벡은 제도화된 사회연대경제 모델로, 현재 1.1만 개 조직, 22만 명 고용, 연매출 470억 캐나다 달러 (약 44조 원)를 기록

출처: World Economic Forum, 5 Ways Governments Can Unlock a More Social Economy, 23 May 2022
Eurostat, European Union Labour Force Survey (EU LFS), 2021
<https://youtu.be/S6Wzip18zw>
이로운넷, 2021, 글로벌 사회적경제 트렌드
더나은미래,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계 발표...고용인원 25만명, 자산은 1214조원, 채예빈 기자, 2024.11.06

한국 사회적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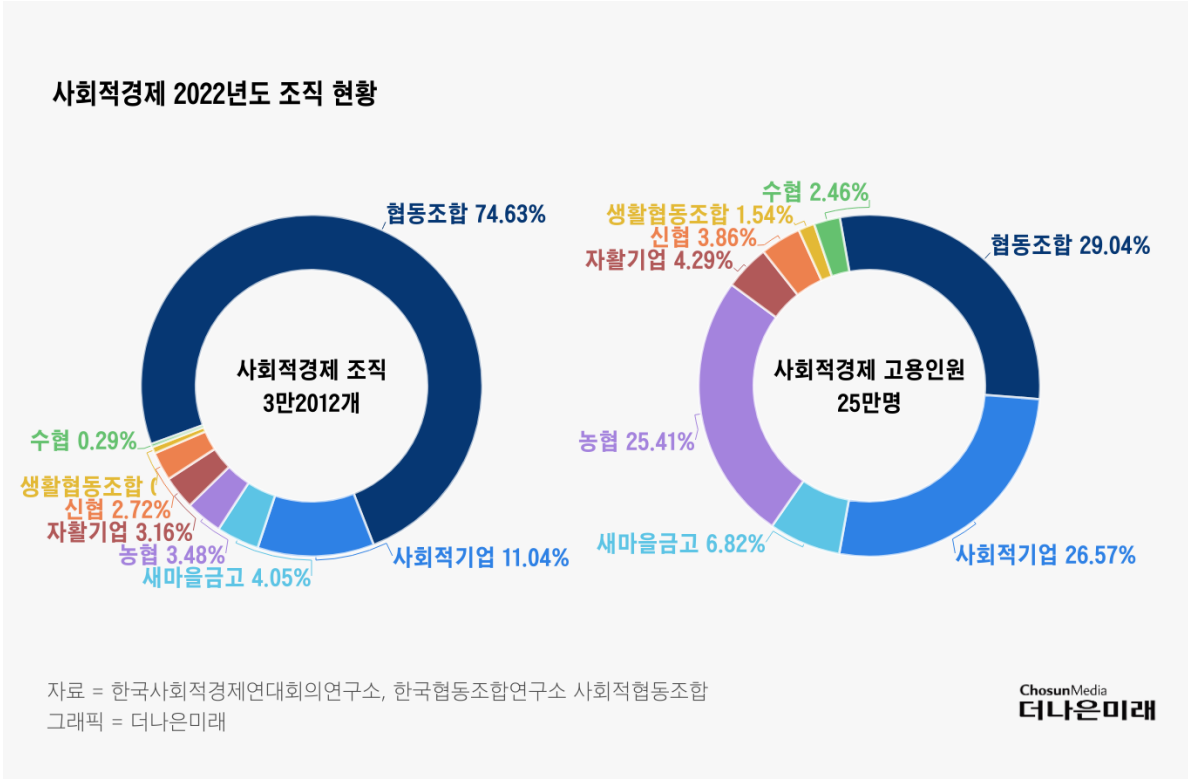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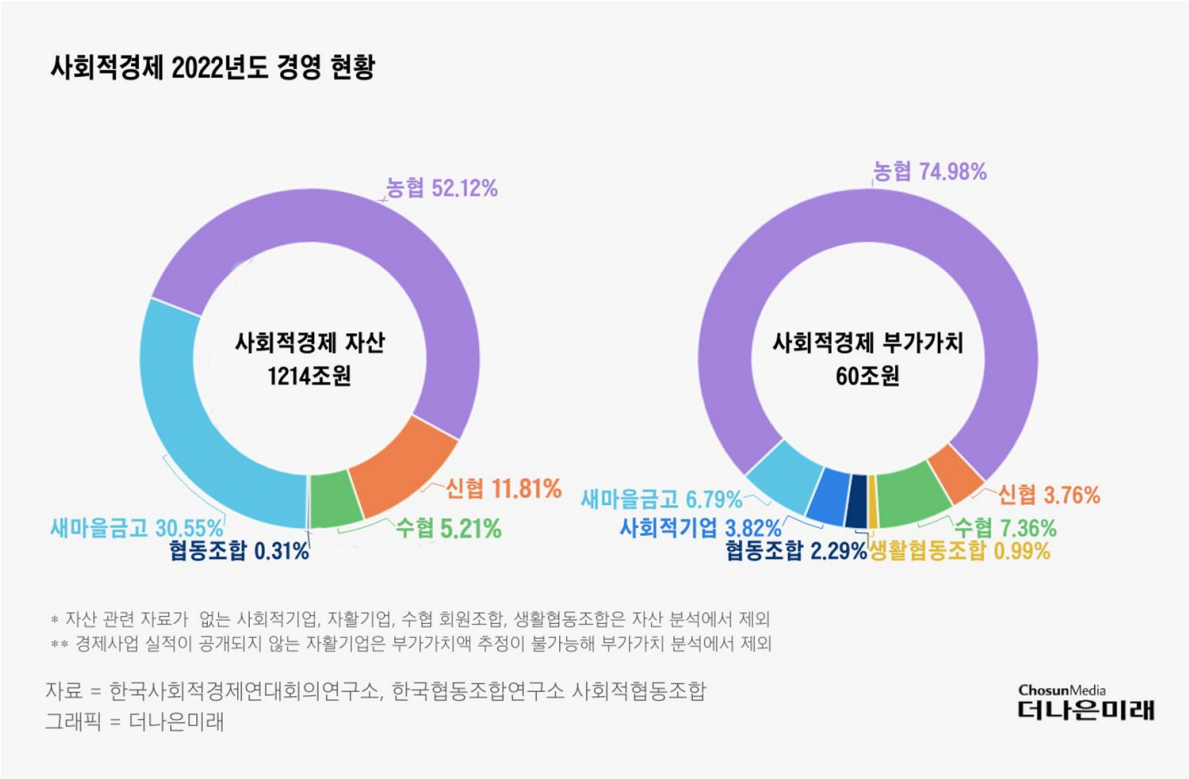
- 공식적으로 지정한 사회적경제 범주로 보면
약 3만 2천개 기업, 25만명 고용, 60조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

- 더나은미래(2024.11.06)

- OECD 사회연대경제의 관점으로 계산하면
총매출은 약 100조로,
78만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체 GDP의 14.47%를 차지

- 정현곤 원장(2023.7)

국내 첫 사회적경제 통계 발표: 고용 25만 명·자산 1214조 원



- 소셜벤처, 사회적농장, 산림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공개된 자료가 없어 이 통계에는 제외되어 있음

한국의 사회적경제도 세계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빠른 성장

“한국은 회원국 중에서도
사회연대경제에 매우 선도적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 안토넬라 노야 OECD 사회적경제·사회혁신실장(2022.10)

“한국의 사회연대경제는 국제사회에서 케이(K)-팝이나
케이(K)-드라마와 마찬가지로 떠오르는 샛별과 같다.
지구촌 남반구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은
한국이 글로벌 차원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유엔사회연대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의 샬탈 라인 카르펜티에 의장

국제

사회혁신 연구 중인 OECD, 한국에 주목하다

문일요 기자

입력 2024.10.10 00:03 수정 2024.10.10 00:13

| [인터뷰] 장희수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 연구원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아시아 열공 중이다. 가입국 38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 두 곳에 불과하지만 사회혁신 분야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장희수 OECD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부 연구원은 지난 2022년 OECD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혁신 권고안' 채택 이후 국제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태국과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 절차를 밟으면서, 기존 회원국인 한국과 일본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분야에서 아시아가 결코 유럽보다 뒤떨어지지 않고 또 활발한 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더버터

정치/사회

“훌륭한 K-소셜이코노미, 전 지구적 해답 찾을 길잡이로”

26일 '2022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온·오프라인 개최
'지속가능한 일과 삶, 사회적기업에서 답을 찾다' 주제로
EC·ILO·OECD·UN 등 국제기구서 주목받는 한국의 성장

이로온넷=양승희 기자 입력 2022.10.27 06:00

댓글 0

“국제사회에서 K팝, K드라마에 이어 K소셜이코노미가 한국의 가장 훌륭한 상징이 될 것이다.”

유럽위원회(EC),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사회개발연구소(UNRISD) 등 국제사회를 이끄는 주요 기구에서는 한국 사회연대경제의 성장과 역할에 공통적으로 기대감을 표현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사회연대경제 발전에 적극 참여해 짧은 기간 내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으며, 이는 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 좋은 영감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

© 이로운넷

경제 경제일반

“한국 사회연대경제, K-팝처럼 국제사회 샛별이죠”

유엔 태스크포스 카르펜티에 의장

곽정수 기자

수정 2024-07-13 18:02 등록 2023-05-18 19:19



카르펜티에 의장.

그러나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정체성 명료화와 실천 동력이 필요

〈한국 사회적경제 유형과 정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는 기업
목적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조합원 권익 향상, 지역 사회 공헌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률(시행)	사회적기업육성법(2007)	협동조합기본법(2012)	마을기업 육성사업지침(20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2)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 필요성

- 법적 근거가 있는 4대 유형만 전통적 사회적경제로 구분
- 제도적 구분에 따른 특정 조직라는 인식, 정부 의존 이미지, 개별법 협동조합 등 기존 조직과의 분리, 정치적 프레임에 따른 왜곡 등의 한계 노출
- 또한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 축소 및 정책 폐지로 인해 극심한 정책 환경 변화를 겪음

출처: 김형미(2023, 12. 4).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라이프인.

한국 사회적경제 정책의 구조적 한계와 전환 필요성

- 1) **개별 조직·단기 성과 중심 정책 구조의 한계** : 사회적경제 정책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개별 조직 설립을 중심으로 일정 성과를 거두었으나, 인증·계량 중심 설계로 인해 정책의 초점이 개별 조직 성과와 단기 지표에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는 ‘지원 대상의 집합’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화되었고, 연대·협력, 지역 문제 해결, 시민 참여와 같은 핵심 작동 요소는 정책적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 2) **단기 사업 중심 운영과 생태계 축적의 제약** : 부처별 분산 운영과 단기 공모사업 중심 정책은 조직의 자율성, 중장기 전략 수립, 지역 기반 협력 구조 형성을 제약했다. 중간지원체계 역시 행정 지원 기능에 집중되며, 조직 간 협력 촉진과 학습·축적이라는 생태계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지속되었다.
- 3) **생태계 차원의 연대·협력 역량 미형성**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에도, 조직 간 연대와 협력, 공동 문제 해결 역량 등 생태계 차원의 작동 구조는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 이는 제도 확산이 곧 사회적 가치 창출과 문제 해결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
- 4) **복합 사회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구조 전환 요구** : 기후·돌봄·주거·지역 소멸 등 복합 사회문제가 국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개별 조직·단기 성과 중심 정책 구조는 대응 역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연대경제는 지역 단위 협력과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문제 해결 주체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역시 질적 전환과 생태계 재구성이 요구되는 단계에 진입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유형별 현황

□ 구사회적경제

- 제도화·성장은 빠르게 이뤄졌고,
- 자율성과 민주성은 점진적 강화가 필요

농협

- 해방 이후 농업 발전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는 과정에서 제도화
- 1960~80년대 국가 주도의 농업·농촌 개발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운영
- 경제 규모는 성장했으며, 조합원 참여와 자율성은 민주화 이후 점진적 확대

수협

- 일제강점기 수산업 조직을 기반으로 제도적 재편을 거쳐 형성
- 국가 정책 및 행정체계와 긴밀하게 연동된 구조 속에서 운영
-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을 경험하며 제도적 안정성 강화

산림조합

- 일제강점기 조직을 계승해 정부 주도로 재편
- 산림 정책 집행 및 사업 수행 기능이 강조되어 운영
- 민주화 이후 조합장·중앙회장 선출제 도입으로 운영 방식에 변화

신협

-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 자조운동에서 출발
- 지역사회 기반의 상호부조와 경제적 자립을 핵심 가치로 성장
- 제도화·금융화 과정에서 역할과 정체성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경험
- 최근 일부 신협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화의 중요한 주체로 기능

새마을금고

- 재건국민운동과 새마을운동 등 국가 주도의 지역개발 정책과 함께 성장
- 급속한 확장 과정에서 구조조정과 제도적 정비를 반복적으로 경험
- 전국적 조직망을 바탕으로 지역 금융 인프라로서의 역할 수행

- 시민사회의 실천을 바탕으로 등장
- 제도화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외형적 성장 성공
- 향후 과제는 자율성·정체성·지속가능성 강화

□ 신사회적경제(1990년 이후)

생협

- 1980년대 중반 이후 ‘안전한 먹거리 공동구입’을 중심으로 성장
- 한살림, 두레, iCOOP 등 전국 단위 연합체 형성
- 1999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으로 제도화
- 시민 참여와 생활 기반 실천이 강점

자활기업

- 1990년대 도시 빈민 지역의 노동자협동조합운동에서 기원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자활사업으로 제도화
- 돌봄·청소·집수리·재활용 등 생활밀착 업종 중심
- 규모는 크며, 사회적경제적 성격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로 논의됨

사회적기업

- 사회적 목적과 영업활동을 결합한 조직
-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으로 제도화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구분
- 초기 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마을기업

- 주민 주도의 지역 자원 활용형 기업
- 2011년 ‘마을기업’ 명칭 확정, 2013년 시행지침 마련, 2025년 마을기업법 제정
- 주민 참여 비율과 공동 소유 구조를 제도적으로 요구

농어촌공동체회사

-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조직
- 지역 주민 참여, 일자리·소득 창출, 지역 문제 해결이 목적
- 다양한 조직 형태 허용

협동조합(기본법)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이후 급속히 확산
-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
- 다양한 조직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
- 양적 성장은 빠르며, 안정적 운영과 지속가능성 확보가 과제로 제기됨

[참고] 해외 법제화 사례

🌐 유럽

- 가장 제도화 수준이 높은 지역
-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은 전형적인 'SSE 기본법 국가'
- 이탈리아는 헌법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명시
- 북유럽·독일 등은 개별 제도는 강하지만 포괄법은 없음

🌐 라틴아메리카

- 헌법·국가법·지역법이 혼합
- 브라질·볼리비아·에콰도르 등은
→ 연대경제를 발전 전략·사회정책과 결합

🌐 아프리카

- 2010년대 후반 이후 빠른 법제화
- 튀니지-세네갈-카메룬-지부티 등
→ 최근 글로벌 SSE 법제화의 중심축

국가	법 명칭	제정연도
콜롬비아	연대경제 기본법	1998
벨기에(알로니아·브뤼셀)	사회적경제 법령	2008
에콰도르	민중연대경제및금융정부조직법	2011
스페인	사회적경제 기본법	2011
그리스	사회적경제및기업기본법	2011
멕시코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2012
캐나다(퀘벡)	사회적경제 기본법	2013
포르투갈	사회적경제 기본법	2013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법	2014
루마니아	사회적경제법	2015
카보베르데	사회적경제법	2016
그리스	사회연대경제법	2016
불가리아	사회연대경제 기업법	2018
슬로바키아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법	2018
카메룬	사회적경제기본법	2019
지부티	사회연대경제법	2019
튀니지	사회연대경제법	2020
세네갈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2021
코트디부아르	사회연대경제법	2025

예) 주요 사회문제별 실천 사례

〈장애·포용〉

- 대구 안심마을 협동조합 : 발달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관계 중심 공동체. 30여 개 협동조합·사회적기업이 교육·돌봄·복지로 연결
- 에이아이웍스(AIWORKX) : AI 데이터·SW 테스트 사회적기업. 발달장애인 등 포용적 고용 + 기술 혁신 결합

〈기후·공정전환〉

-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 주민 주도 태양광, 발전 수익을 ‘햇빛연금’으로 환원. 주민 3,100명 참여, 참여율 90% 이상

〈지역소멸〉

- 고래실 협동조합(옥천): 문화·교육·돌봄을 결합한 농촌 재생 공동체 모델

〈주거〉

- 위스테이별내 : 국내 최초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임대주택. 입주민 100% 조합원, 주거 운영에 직접 참여

〈의료·돌봄〉

-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사협) : 주민이 조합원으로 공동 소유·운영하는 1차 의료기관. 예방·건강관리·돌봄을 결합한 생활권 기반 의료 모델(예: 안산의료사협, 성동의료사협 등)

〈공동 판로〉

- 대구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경제기업 공동 판로·유통 플랫폼. 공공·대형 시장 대상 연합 영업 구조



AIWORKX



IV. 국가 전략 속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와 정책 연계

사회연대경제는 헌법 가치를 구현

헌법 조항	헌법의 핵심 의미	사회연대경제의 특성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모든 국민은 존엄한 존재이며 국가의 보호 대상	취약계층 고용, 돌봄·복지 서비스, 인간 중심 경제
제11조 (평등권)	사회적 신분·조건에 따른 차별 금지	고용 차별 완화, 노동시장 접근성 확대, 포용적 일자리
제23조 ② (재산권의 사회적 의무)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	이윤의 사회적 환원, 공동 소유·공동 책임 구조
제32조 (근로의 권리)	근로 기회 보장, 인간다운 노동	안정적 일자리, 노동자 중심 조직 운영
제34조 (사회보장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돌봄·복지·지역 서비스 제공, 사회 안전망 보완
제119조 ① (자유와 창의)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	자율적 기업 활동, 민간 주도성
제119조 ② (경제의 민주화)	경제력 남용 방지, 균형 발전	협동조합, 민주적 의사결정, 경제 권력 분산
제124조 (건전한 소비행위 계도)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	소규모·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조직 보호

[참고] 헌법에 사회연대경제를 명시한 나라

- **이탈리아** 헌법 제45조 : 공화국은 사적 투기를 지향하지 않는 상호부조적 성격의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증진·보호하며 그 성격과 목적을 보장한다
- **스페인** 헌법 제129조 2항 : 공공 당국(국가 기관)은 기업 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촉진하고, 적절한 법률을 통해 **협동조합**을 장려해야 한다
- **에콰도르** 헌법 제283조 : 경제 체계는 공공, 민간, 혼합 경제, **지역 공동체 연대 형태**의 경제 조직 및 헌법에 의해 정해진 기타 형태로 구성된다.
- **브라질** 헌법 제174조 §2: 국가는 법률을 통해 '**협동조합 활동(cooperativism)**' 및 기타 결사 형태를 지원·장려(stimulate)해야 한다.
- 그 밖에 **멕시코, 콜롬비아** 등

- 사회연대경제는 헌법이 규정한 인간의 존엄, 평등, 공공복리, 그리고 경제의 민주화를 경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식
- 이는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대안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을 갖는 시장경제'를 실천하는 한 축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경청과 통합 | 공정과 신뢰 | 실용과 성과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중심의 외교안보
----------------	-----------------	-----------------	---------------	----------------

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1. AI 3대 강국 도약 2. 기초가 탄탄한 과학기술 3. 혁신으로 도약하는 산업 르네상스 4.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5. 성장을 복돋는 금융혁신	1.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2.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3. 협력과 상생의 공정경제 4.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1.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2. 내 삶을 돌보는 복지 3.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 4.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5.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6. 내 삶에 기회를 여는 성평등 7. 각자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 8.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2.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3.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	--	--	--	---

19개 과제	29개 과제	23개 과제	37개 과제	15개 과제
--------	--------	--------	--------	--------

출처: 대한민국정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행안부·예산처

◎ 과제목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성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채투자 평가제도** 정비
*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탁의 출자 허용 등
**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입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 기대효과

-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타 국정과제와 사회연대경제의 연계성

전략7: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국정3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재생에너지협동조합

[국정40]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자원순환 사회연대경제, 생협, 로컬푸드

전략12: 희망을 실현하는 농산어촌

[국정68]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민협동조합, 로컬푸드, 생협

[국정70]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민공동체형 햇빛소득마을

전략14: 내 삶을 돌보는 복지

[국정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국정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장애인돌봄서비스 및 고용 사회연대경제

[국정 85] 일차의료 기반의 건강·돌봄으로 국민 건강 증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략9: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 성장

[국정54] 소멸위기지역 재도약을 위한 지원 강화:

마을기업, 도농상생협동조합 등

전략10: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국정61]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

소상공인협동조합

[국정63]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사회주택, 주택협동조합

전략16: 인구위기를 극복하는 대전환

[국정87]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다함께돌봄센터

[국정91]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

시니어협동조합, 지역공동체협동조합

전략17: 누구나 존중받는 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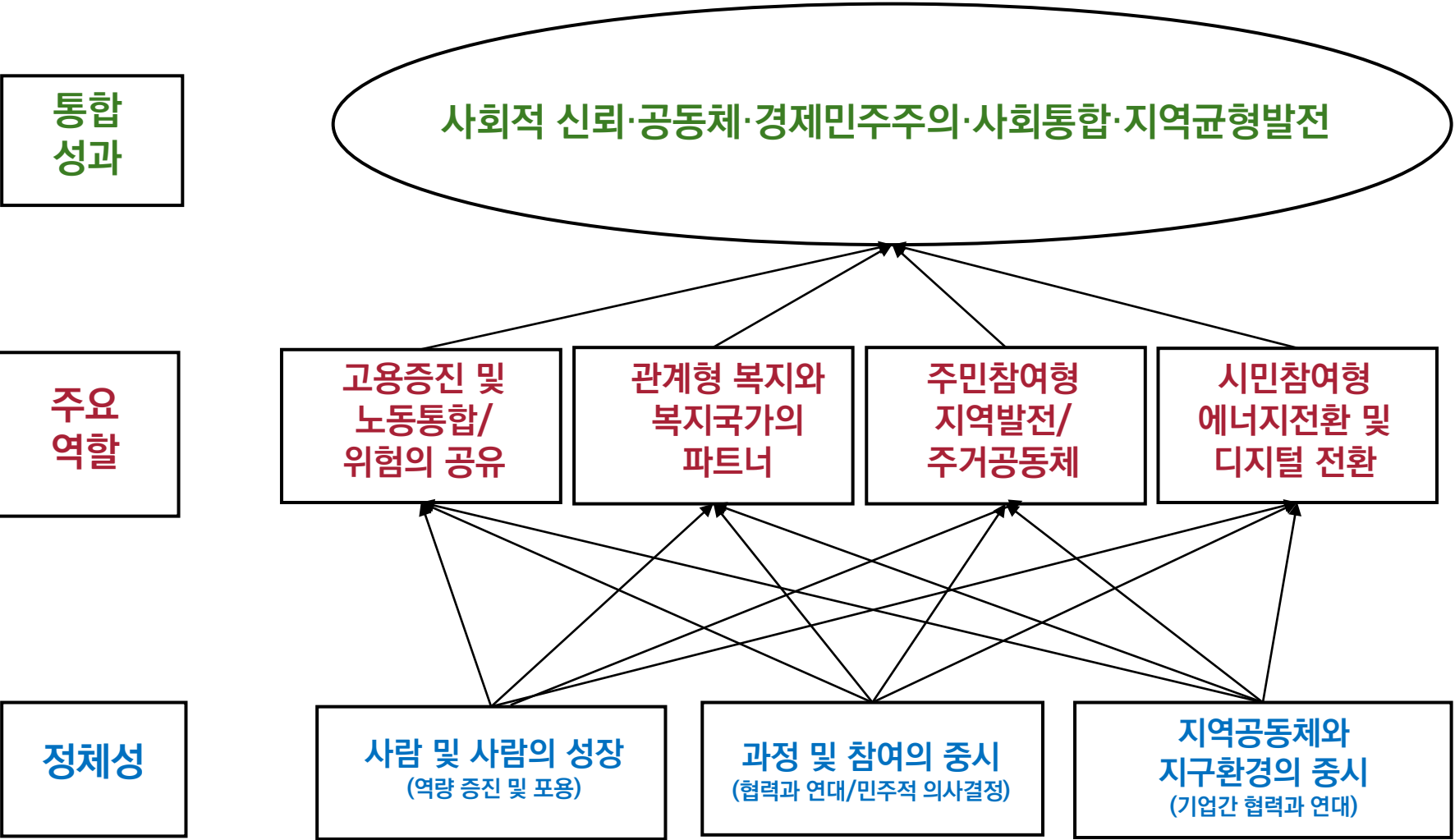
[국정95]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종업원 소유기업, 프리랜서협동조합

[국정96]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지역서비스협동조합,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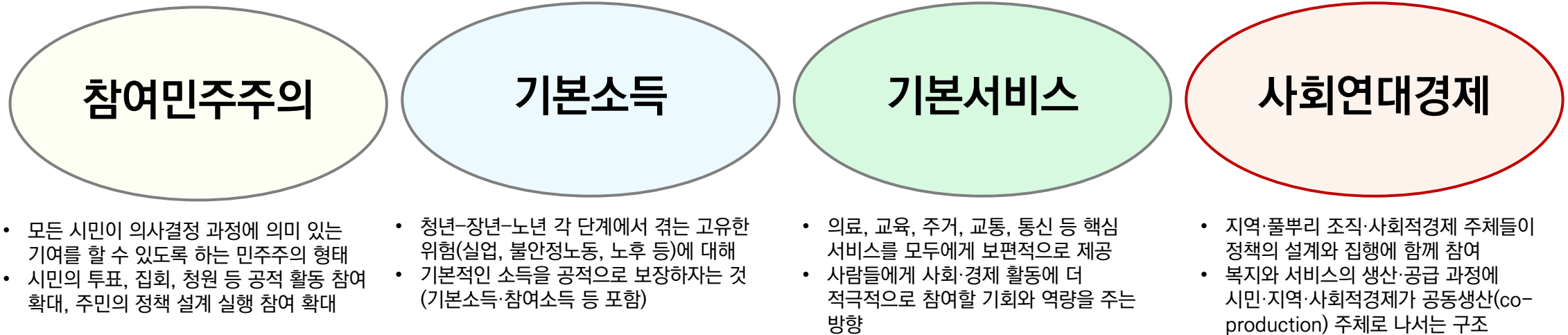
사회연대경제의 역할과 기대 성과



출처: 장종익(2025), 사회연대경제 국정과제와 향후 대응방향

사회연대경제는 ‘기본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하고 있음

- 기본사회가 강조되는 이유?
 - ✓ 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단기계약 등 불안정 노동의 일상성
 - ✓ 기대수명 증가로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인생 리스크(실업, 질병, 돌봄, 빈곤) 증가
 - ✓ 삶의 방식·욕구가 너무 다양해져 중앙집중·획일적 복지제도가 맞지 않음
- 기본사회 = 참여민주주의 + 기본소득 + 기본서비스 + 사회연대경제



정책 환경 변화1: 국정과제 81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 과제목표

-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기반 및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성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 사회연대경제 통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
*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통일된 정의·범위 규정, 행정·재정지원 근거 마련 등
-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 기본·시행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관리·지원과 개별 조직이 업종·분야별로 중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지역 특성에 부합한 성공모델 확산을 위해 지원기관(사회적기업진흥원 등) 기능 및 시·도별 지원센터 확대, 기초지자체 단위 민관협의체 구축
-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신탁 등 상호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독려 및 지역재투자 평가제도** 정비
 - * 지원자금 마련 위해 상호금융중앙회 내 기금 조성, 신탁의 출자 허용 등
 - ** 금융회사의 지역 자금공급, 서민대출 지원실적 등을 평가
 - 금융권 자금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육성
 - 미소금융 등 도매자금(사회연대경제조직에 임차·운전·시설자금 등을 제공)의 대출·투자규모와 정책금융기관의 보증공급 확대
- **사회연대조직 성장 지원**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자활기업 등 개별 조직간 협력·연대사업 지원, 스케일업, 컨설팅·교육 등 종합적 지원 추진
 - 사회연대조직이 생산한 제품·용역에 대한 공공부문 우선구매 촉진 의무 신설, 국·공유재산 임차료 인하 등 경영부담 경감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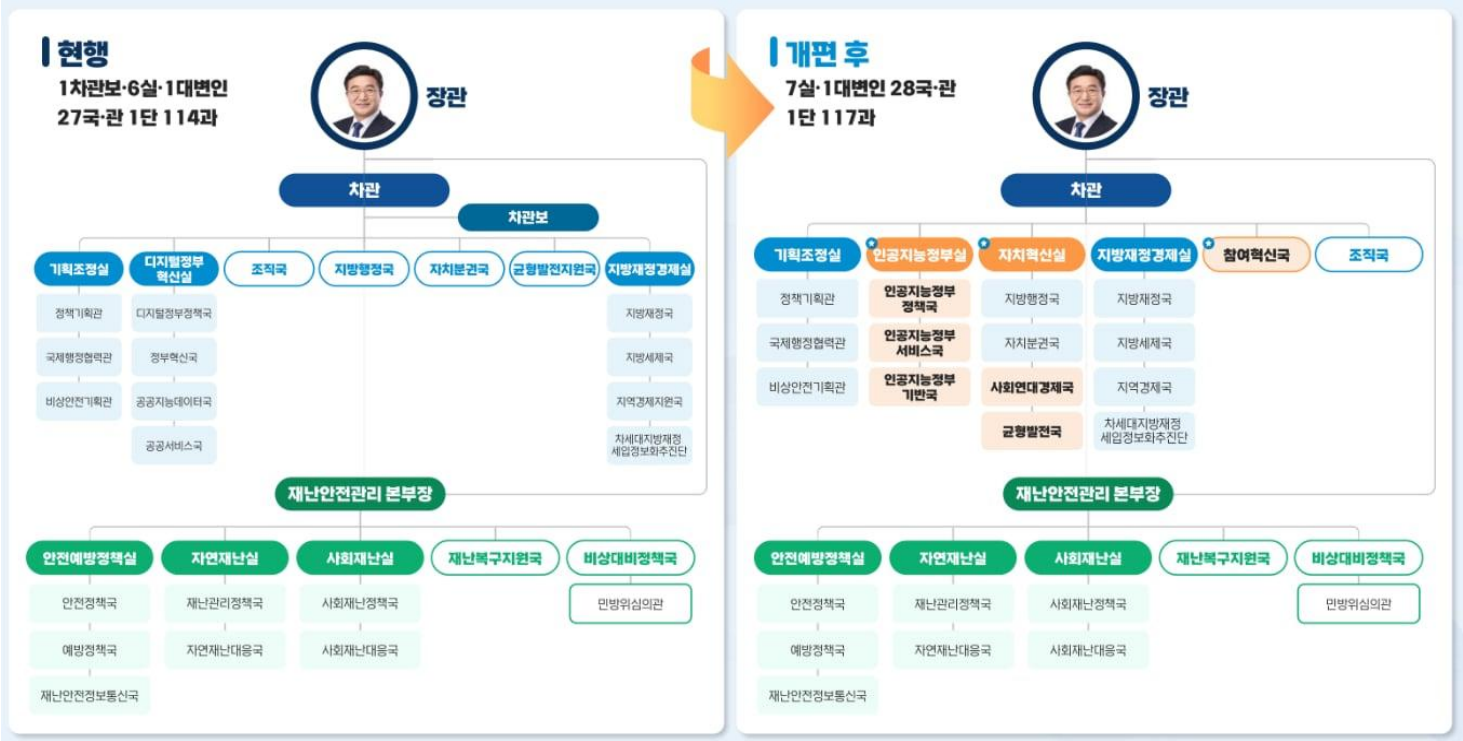
-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고용 창출 및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회복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

정책 환경 변화2: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추진

❖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1.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생긴다 (정책의 일관성 확보) 지금까지 사회적경제는 정권 변화·부처 입장·예산 편차에 따라 정책이 크게 흔들렸다. 하지만 기본법이 통과되면, • 국가가 사회연대경제 발전 의무를 갖게 됨 • 광역·기초자치단체도 법적 근거 아래 중장기 전략을 의무적으로 수립 • “매년 새 사업 쫓기기”가 아니라 4~5년 단위의 안정적 로드맵 기반 지원으로 전환 ➢ 현장은 정책의 불연속성과 정쟁성에서 벗어나 장기적 계획을 세울 수 있음	2. 부처별로 쪼개진 구조가 “통합 생태계”로 전환된다 지금은 사회적기업(고용부), 협동조합(기재부), 마을기업(행안부), 자활기업(복지부) 이렇게 분절되어 있지만, 기본법은 국가 단위의 공통 정책들을 제공한다. •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국가 대표 지원기관) • 시·도 단위 사회연대경제센터 설치 ➢ 현장은 부처마다 다른 기준·절차·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됨	3. 통합 데이터(통계)가 생긴다 → 정책 타당성·근거가 갖춰짐 OECD도 지적했듯 한국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만 데이터가 있고, 마을기업·자활기업은 통계가 없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 5년 주기 국가·지방 실태조사 의무화 • 통계청과 연계된 통합 데이터 구축 • 지역·유형별 규모·고용·재정·사회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 가능 ➢ 현장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근거 기반 정책의 주체”가 됨	4.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든다 (지방정부 역할 강화) 현재는 • 어떤 지자체는 센터·조례·인력·예산이 풀세트 • 어떤 곳은 담당자 1명 + 소규모 보조금 기본법은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 각 시·도에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 •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구성 • 지역 기반 정책 의무화 및 예산 확보 노력 명시 ➢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줄고, 농산어촌·중소도시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해짐
5. 판로·금융·세제 등 실질적 지원이 법적 근거로 강화된다 기본법은 단순 선언이 아니라, 다음 항목을 국가의 책무로 둔다. • 판로 지원 및 우선구매 확대 • 사회연대금융제도 정비 • 사회연대발전기금 조성 • 세제 감면(국세·지방세) • 조직별 비용지원 및 역량강화 • 사회연대금융중개기관 육성 ➢ 현장은 “지원사업 중심”이 아니라, 금융·시장·세제 기반의 구조적 지원을 받게 됨	6. 조직의 권리·책임·의무가 명확해진다 (정체성 강화) 기본법은 조직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확산 • 투명한 경영공시 • 노동·인권·환경 기준 준수 • 자생력 확보 노력 ➢ 조직들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라 →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갖춘 경제 주체로 제도적으로 인정받는 구조로 바뀜	7.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사회연대경제 조직 대표 • 전문가 • 시민사회 ➢ 기존의 “부처 내부에서 결정 → 현장 전달” 방식이 아니라 → 현장이 정책 설계의 공동 주체가 되는 구조로 전환됨	8. 사회연대경제의 위상이 달라진다 기본법은 선언적이지만, 효과는 크다. • SSE가 “복지의 일부”나 “보조금 사업”이 아니라 • 국가의 경제·사회정책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됨 • UN·OECD·ILO 기준과도 정합성 확보 • 국제 협력 및 투자·프로그램 연계가 쉬워짐 ➢ 한국 SSE가 ‘국제 기준’의 경제 영역으로 공식 인정받는 전환점

정책 환경 변화3: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서 행안부 지정



2025.11.25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사회연대경제국 신설)

- 사회연대경제제도과, 사회연대경제지원과, 민간협력공동체과, 지역금융지원과



정책 환경 변화3: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로서 행안부 지정

❖ 행안부가 사회연대경제 주무부처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1. 지방정부 중심 생태계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지역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므로: • 광역·기초 지자체의 전담부서 설치 근거가 강화됨 • 지자체의 중장기 사회연대경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지역 정책 역량 상승 • 지역별 편차가 줄고 기초 지자체 중심의 SSE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 ➢ 현실적으로 가장 강하게 체감될 변화	2. 부처 간 분절이 완화되고 ‘통합 정책 틀’이 생긴다 한국은 지금처럼 각 부처가 별도 사업을 운영하면 중복, 단발성, 기준 혼란, 평가 불가능, 조직 정체성 약화 행안부가 주관하면: •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을 하나의 통합 정책 패밀리로 묶을 수 있음 • 부처 간 조정기능이 향상 • 최소한 기본계획·지표·용어·데이터는 통일 가능 ➢ “하나의 법 아래, 여러 시장형태”라는 SSE 국제 기준에도 더 부합	3. 지역 문제 해결 중심의 ‘로컬 SSE’가 국가 정책의 중심이 된다 행안부 주무는 다음과 같은 시너지를 만든다: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농촌 활성화, 지역순환경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이 정책들과 사회연대경제는 원래 높은 친화성을 가진다. 행안부가 맡으면 자연스럽게 “지역 기반 SSE 모델”이 확산됨. ➢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의 SSE가 국가 정책 프레임이 됨	4. 통합 데이터 구축이 가능해진다 OECD도 지적했듯, 한국은 공식 통계가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만 있고 • 마을기업·자활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부처별 행정자료만 존재 행안부가 지자체 행정데이터를 컨트롤하면: • 지역 단위 실태조사를 통일된 기준으로 실시 • 부처별 자료를 통합할 수 있는 데이터 허브 역할 • 5주기 기본계획 기반의 통계체계 구축 가능 ➢ 국제 비교가 가능할 정도의 기초 통계 확보
5. 중간지원의 구조 개편이 이루어진다 행안부가 주관하면: • 현재 부처별 중간지원 기능(센터, 지원단)을 지역 기반 체계로 재정렬 • 광역·기초 단위 센터의 기능·역할이 강화 • 기존의 ‘부처 중심 전담센터’가 ‘지역 중심 체계’로 전환 ➢ 국가·광역·기초의 3층 구조를 갖춘 일관된 지원체계 등장	6. 정책의 정쟁화(이념화) 위험이 줄어든다 행안부는 고용·복지 부처보다 정치적 진영 프레임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영역이다. 그래서: • 사회연대경제가 ‘일자리 정책·복지 정책’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남 • 지역경제·주민자치·균형발전 중심의 안정적 정책 프레임 가능 • 중장기 정책지속성이 훨씬 높아짐 ➢ 현장이 매년 “이번 정부는 지켜줄까?”를 걱정할 필요가 줄어듦	7. 부처 간 정책 협력이 강화된다 (특히 복지·고용·농촌·도시 분야) 행안부가 대장을 서면: • 복지부: 자활·돌봄·지역사회서비스 • 고용부: 고용성과·WISE(취약계층 고용) • 농식품부: 지역경제·농촌 활성화 • 국토부: 도시재생·지역혁신 • 중기부: 사회적기업·소셜벤처 협력 이렇게 여러 부처 사업을 “조각조각 공동화”가 아닌 총괄·조정하는 역할로 전환 가능. ➢ 행안부가 ‘조정자’(coordinator) 역할을 수행	8. 현장 조직의 권리·의무가 제도화된다 법안이 마련해 놓은 조직의 책무: • 사회적가치 실현 • 투명한 경영공시 • 노동·인권·환경 기준 준수 • 자생력·지속가능성 확보 행안부는 지자체를 통해 이 기준을 점진적으로 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다. ➢ “지원받는 조직”에서 → “사회적 책임을 가진 경제주체”로 인식 변화

V. 지역단위 사회연대경제 대응 전략

현장 사회연대경제조직의 3대 전략

정체성·
사회적 가치
명확화



기본적 투명성·
책무성을 갖춘
운영체계 구축



지역 기반
협력·연대 및
성장역량 강화

- 우리 조직이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와 미션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
- 조직의 활동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기본 지표 마련
- 일하는 방식에서 노동, 인권, 환경 등 기본적인 책임 요소를 차근차근 반영

- 기초 회계 기준 정비
- 간소화된 경영공시 대비 정보정리(경영요약서)
- 민주적 운영의 최소 기준 마련(의사결정 과정과 결과 기록)

- 강북구 내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등과 함께 지역 의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을 기획·추진
- 공동 브랜드·공동 판로·공동 물류 등 연대 기반 사업 참여
- 기초지자체 민관협의체 참여와 지역 거버넌스 연계
- 사회연대금융 대비 사업계획·IR 역량 강화
- 공공조달(우선구매)·지역시장 진입 준비

연합·대표조직의 3대 전략

강북형
사회연대경제
의제 설정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운영



조직 간 연대·
공동사업 추진

- 강북구의 복합적인 지역문제(돌봄·주거·환경·지역상권 등)를 기반으로 핵심 의제를 발굴
- 해당 의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사업을 기획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행

- 기본법 제정 이후 설치될 사회연대경제 민관협의체에 대비해 지역 내 협력 구조와 논의체계를 준비
- 돌봄·환경·일자리 등 주요 분야별 민관 소통·논의 구조(예: 분과 간담회, 실무회의)를 구성해 지역 현장의 의견을 정리하고 정책 제안의 기초를 마련
- 구청, 의회, 복지·교육·보건 등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 향후 공식 거버넌스가 작동할 때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 공동 브랜드, 판로, 물류, 교육, 홍보 등 다양한 연합형 협력사업을 추진
- 돌봄×환경×교육 등 영역 간 연계를 활용한 융합 프로젝트를 기획
- 지역 금융기관·기금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인 지원 구조를 구축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3대 전략

지역문제 기반
‘강북형 SSE
모델’
개발·실행



민관·공공기관
연계 및
정책 중개
플랫폼 구축



조직 역량 강화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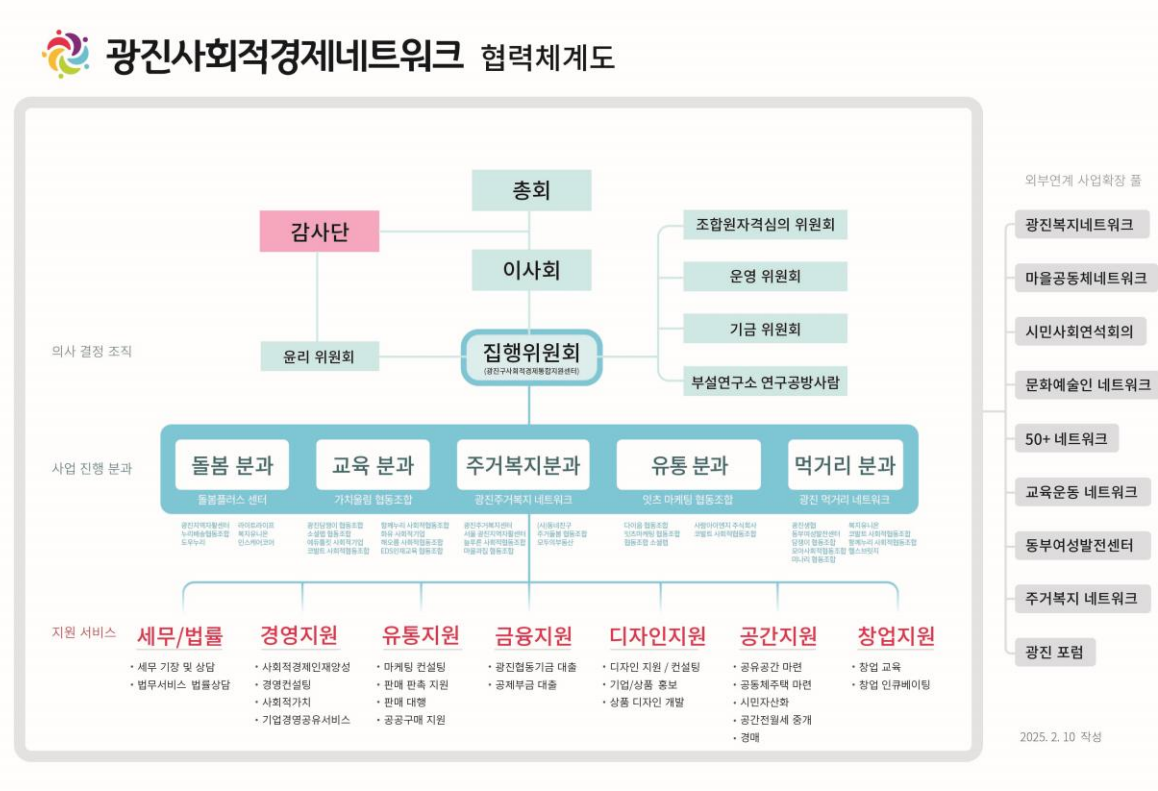
- 고령돌봄, 주거취약, 폐자원 순환, 지역상권 회복 등 협의회에서 설정한 지역 의제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모델을 구체화
- 자활, 마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현장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조정하여, 통합적 실천이 가능한 솔루션을 설계·운영

-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제와 방향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구청 및 관계 부서와의 협업 절차를 조율하고 정례화
- 복지관·도서관·학교 등 지역 공공기관과 조직 간 사업 연계를 지원하고 실무 협력을 중개
- 정책 공모, 기금, 지원사업 등 외부 자원과 현장 조직을 매칭하여 실행 기반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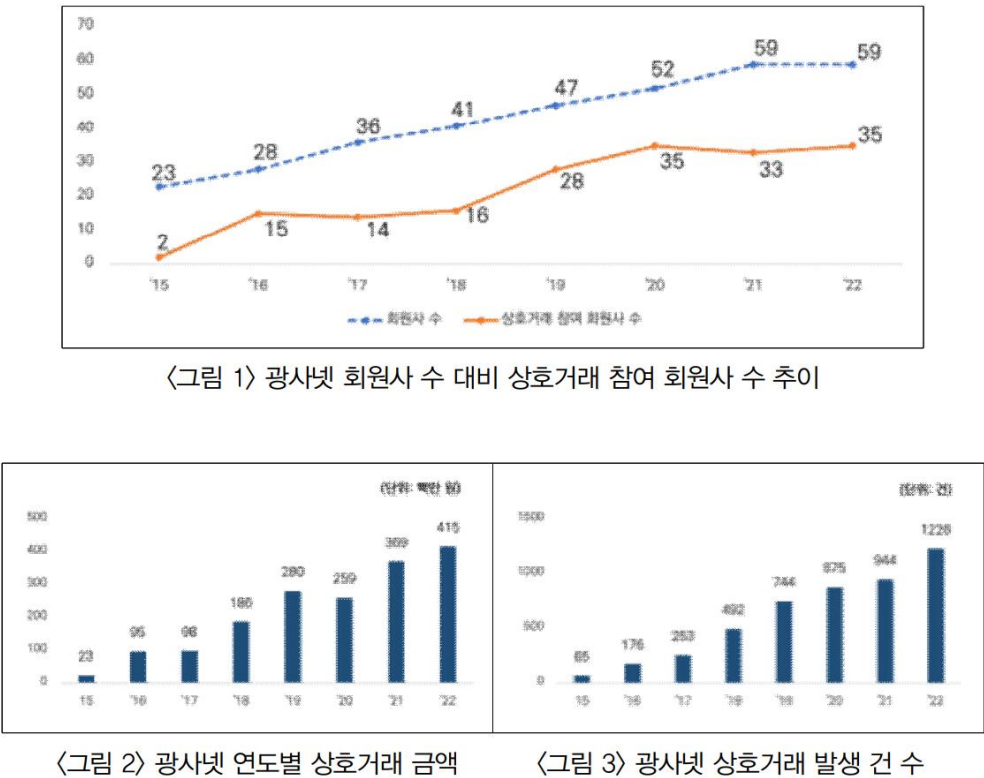
- 회계·재무·경영공시 등을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표준 자료·매뉴얼 제공 및 기초 지원
- 사회적 가치 측정과 기록·관리 방법에 대한 실무 중심 교육 운영
- 조직의 단계별 필요(창업기-운영기-성장기)에 맞춘 맞춤형 성장 지원 프로그램 마련
- IR, 공공구매, 사업계획 수립 등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 역량 강화 과정 운영

지역 내에서 깊은 유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 행동을 촉진하고,

[우수 사례]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협력체계도



[우수 사례]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상호거래



출처: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10차 총회자료집(2025)

출처: 김미영, 유한나 (2024).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거래 :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14(1), 59-95.

상호 연대 기반의 자립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

[우수 사례] 대구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 → 유통망(혈류)

[우수 사례] 대구사회가치금융 → 자금 공급(심장)

- 사회적경제 금고 <재>대구사회가치금융 출범 4년
- 외부 지원 없이 사회적기업 30여곳 출자
- 기금 17억원 약정, 부금대출 규모 2억여원

지난해 말 기준 대구사회가치금융의 자조기금 조성 규모는 17억원으로 파악됐다. 자조기금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 자금수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매월 회원사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지역 사회적기업 54개사가 8억2천만원의 기금을 약정했다. 월평균 납입금액은 약 1천500만원. 부금대출 규모는 2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적금융으로는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로,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 역시 비수도권에선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사회가치금융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자조(自助)금융 실현'을 목표로 2022년 설립한 지역 최초 민간 주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다. 외부 지원 없이 30여곳의 사회적기업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6천만원을 주춧돌로 성장했다.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자금이 지역 내 일자리와 돌봄으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방파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대N에서 1대1로 문제 해결 공공구매 솔루션"
대구시 사회적기업 종합유통채널 **무한상사**와 함께 하세요.



무한상사의 역할 안내도



